

봄의 향기(화순 영벽정)(출처: 2021 전라남도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제93호

제359회 ~ 제362회

# 전라남도의회 소식

Jeollanamdo Provincial  
Assembly News



전라남도의회

<https://www.jnassembly.go.kr>





## Contents

- 004 | 신년사
- 006 | 제359회 임시회 개회사
- 007 | 제359회 임시회 ~ 제362회 임시회 운영 성과
- 008 | 주요 의안 처리현황
- 028 | 5분 자유발언
- 058 | 상임위원회 활동
- 072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085 | 의원 등정
- 094 | 의원 기고
- 154 | 의회 안내

### 전라남도의회 소식 VOL.93

발행인: 의장 서동욱 | 편집인: 사무처장 최종선  
발행처: 전라남도의회  
편집위원: 차영수, 임춘모, 조영식, 황의철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 (061)286-8471  
팩스: (061)286-8448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 곳곳에는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감염병 차단에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방역 최일선에서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특별법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섰습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남 의대 설립, 2차 공공기관 유치,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 본예산 14조 4천 여억 원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의회 중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여의도정책연구원 이 주관한 지방자치평가연계 우수의정단체 대상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2년째 지속되면서 도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상생과 화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며 전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변이들의 출현으로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며 도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께 온기를 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고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등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치법규 정비와 차질 없는 인사권 독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지방자치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전라남도의회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며 따뜻한 복지를 실현해 가겠습니다.

현재 저출생·고령화의 속도와 강도는 우리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재의 속도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된다면 우리 전남의 22개 시·군 중 18곳이 30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은 긴급한 현안이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국회에서 종합적인 지원책과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마음

으로 노인, 여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정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넷째, 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를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의정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의, 예산심사 등을 통해 주요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58명의 도원은 목표를 향하는 길에서 생기는 고난과 장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자세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중



## “도민이 원하는 민생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도민이 원하는 민생현안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변이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상생과 화합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전라남도의회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며 전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해보면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사상 최초로 전남예산 11조 원 시대를 열었고, 한국에너지공단법과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이 제정됐으며, 전라선 고속철도와 여수~남해 해저 터널 등 도민 숙원 SOC가 국가계획에 반영되며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지방자치평가에서 우수 의정단체 대상 기관표창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국 광역의회 중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에도 그동안 우리가 거둔 성과를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전남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경제 활력의 혜택이 도민 모두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59회 임시회는 2022년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해 도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도 있는 논의와 창의적인 대안 제시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58명의 도의원은 ‘목표를 향하는 길에서 생기는 고난과 장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자세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359회 임시회 ~ 제362회 임시회 운영 성과



촉구 건의안, ‘농업의 소득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제361회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도민의 생활 안정 지원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조례안 등 3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했다.

김한중 의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되었다”며 “그동안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한 어려움을 간내해 주신 자영업자분들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4차 접종에도 적극 참여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제362회 임시회**는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출연기관 출연 동인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감성일 의장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후반기 도의회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하며,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중)는 2022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감사위원 선임, 조례안 제 개정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제359회 ~ 제362회 임시회를 총 42일간 열었다.

**제359회 임시회**는 2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2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360회 임시회**는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열렸으며, 도청과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감사를 위한 감사위원 선임과 건의안, 조례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처리 비용 정부 지원



## 주요 의안 처리 현황

의원 주요 입법 조례

###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

의결일 2022. 02. 22.  
시행일 2022. 03. 10.



한근석 의원 (비례)

#### 제안이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구성(안 제2조)
- 희생자 및 유족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를 전담하기 위한 전라남도 및 시·군의 사실조사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등에 실무위원회 지원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8조)
- 여수·순천 10·19사건 자료수집범도민운동본부 설치 근거(안 제10조)
-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진상규명 신고 처리에 관련된 사항(안 제12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희생자 및 유족 결정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여수·순천 10·19사건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과 사업비 지원 근거(안 제16조)

#### 기대효과

여수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에 기여

###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

의결일 2022. 02. 22.  
시행일 2022. 03. 10.



박선준 의원(고흥2)

#### 제안이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관리종사자의 권리
- 지원의 범위
-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
-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 인권교육 및 홍보

#### 기대효과

최근 경비원 등 관리종사의 인권 등에 대한 관심과 보호조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고용노동청 등 관리기관과 함께 관리종사자에 대한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감독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전라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일 2022. 03. 24.  
시행일 2022. 04. 07.



정광호 위원장(신안2)

#### 제안이유

전라남도 갯벌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갯벌생태계 보전과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전라남도 갯벌의 활용성 증진과 이용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마련
- 전라남도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 마련
- 갯벌의 중요성과 가치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 갯벌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갯벌생태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기대효과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의 효율적인 활용과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라남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조례안

의결일 2022. 03. 24.  
시행일 2022. 04. 07.



이광일 의원(여수1)

### 제안이유

각급 학교에서 실용영어를 담당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차별적 처우의 금지,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

### 기대효과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헌신하지만 1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대 4년까지밖에 근무할 수 없는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고충처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게 하고 인력은행을 통해 채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함.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일 2022. 03. 24.  
시행일 2022. 04. 07.



윤명희 의원(비례)

### 제안이유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2020년 7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에 의하면, 근·골격 및 척추이상 유병률은 2015년 1.03%에서 2019년 1.37%로 최근 5년간 0.34%p 증가함.
-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의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 매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교육 및 연수 실시,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있음.

### 기대효과

학생의 불균형 체형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위해 제정함.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의결일 2022. 03. 24.  
시행일 2022. 04. 07.



김경자 부위원장(비례)

### 제안이유

도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남도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전라남도 도민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도민교육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기대효과

도정에 대한 도민 참여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 제고에 기여

## 전라남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

의결일 2022. 03. 24.  
시행일 2022. 04. 07.



강정희 의원(여수6)

### 제안이유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개월 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도지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등에는 그 지급을 중단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환수에 대하여 정함

### 기대효과

남성 노동자의 육아 참여 및 육아휴직 사용률을 제고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의결일 2022. 03. 24.  
시행일 2022. 04. 07.



조국현 의원(목포2)

### 제안이유

여성장애인이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중적인 차별을 받는 사회 환경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되 여성장애인 관련 주요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 여성장애인정책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중적 차별구조에 놓여 있는 여성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사회참여 확대, 교육 지원, 고용 확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보육 지원, 건강권 보호, 자립생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여성장애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여성장애인 관련정책을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장애 외에 여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추진 하게 함으로써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나 고용, 사회참여 등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가정 폭력·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결일 2022. 04. 29.  
시행일 2022. 05. 19.



강정희 의원(여수6)

###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전라남도비전으로 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이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함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시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대, 물관리 사업 등에 대하여 정함
- 도시사가 기후위기 대응 시책이나 사업 등에 소요되는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관련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정함

### 기대효과

탄소중립기본법에 부응하여 전라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일 2022. 04. 29.  
시행일 2022. 05. 19.



김태균 의원(광양2)

### 제안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충을 가속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시사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50%→80%)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충전시설 구축 시 충전시설의 운영 경제성 향상을 도모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총주차대수 100개→50개)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비율(2%~5%)을 규정하고 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상향(0.5%~1%→2%~5%)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의 주차 및 충전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기대효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및 설치기준을 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안

의결일 2022. 06. 21.  
시행일 2022. 07. 11.



정옥님 의원(비례)

### 제안이유

전라남도의 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한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회단체연합회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사회단체연합회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기대효과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 각계의 도 단위 사회단체가 지혜를 모아 도민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여 도민 화합을 증진하는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기대함.

## 주요 의안 처리 현황

안건 처리 현황

### 제359회 임시회 총 27건

(2. 9.(수) ~ 2. 22.(화) / 14일간)



### 조례안 15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314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조례안	이혁제의원 등 57명	2022.02.22. (2022.03.10.)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념하고 인간 존엄과 안전 사회를 위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
1536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	한근석의원 등 38명	2022.02.22. (2022.03.10.)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
1584	전라남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2022.02.22. (2022.03.10.)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
1585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보라미의원 등 26명	2022.02.22. (2022.03.10.)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확대 조성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
1586	전라남도 현혈 권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복실의원 등 31명	2022.02.22. (2022.03.10.)	현혈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현혈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수혈용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도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587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구복규의원 등 35명	2022.02.22. (2022.03.10.)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1588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	박선준의원 등 39명	2022.02.22. (2022.03.10.)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을 위한
1590	전라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박진권의원 등 10명	철회	전라남도로 귀어하는 인구의 증가 및 성공적 정착 지원을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철회
1591	전라남도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혁제의원 등 12명	2022.02.22. (2022.03.10.)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생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소양과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1592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승희의원 등 16명	2022.02.22. (2022.03.10.)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으로 위촉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
1599	전라남도의회 고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2022.02.22. (2022.03.10.)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2021. 12. 30.)으로 조직개편 되면서 신설된 「여순사건지원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여순사건지원단에 관한 의안과 청원심사 등 직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600	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2022.02.22. (2022.03.1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기간 확대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160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을 위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2022.02.22. (2022.03.1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13.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근거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규정의 누락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1602	전라남도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2022.02.22. (2022.03.10.)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인사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인사위원회 공인 등록에 관한 사항 규정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603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2022.02.22. (2022.03.10.)	선거관리위원회 및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거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어,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에 관련 규정을 마련을 위해 개정

### 건의안 5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598	국보 '광양 증흥산성 쌍사자 석등' 환수 촉구 건의안	김길용의원 등 35명	2022.02.09.	국보 '광양 증흥산성 쌍사자 석등'을 광양시로 반환할 것과 자치분권 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도 및 예산 지원을 적극 확대할 것을 요구
1605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시행 촉구 건의안	문행주의원 등 36명	2022.02.22.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농민들에게 농산어촌 국토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적 가치 생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농어촌 지킴이 수당 지급 건의
1606	여수국가산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최무경의원 등 36명	2022.02.22.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산업단지특별법' 제정과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권한과 역할 확대 방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
160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김길용의원 등 36명	2022.02.22.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법으로 제정할 것을 건의
1608	전세버스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급 촉구 건의안	이현창의원 등 29명	2022.02.22.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포함시켜 효율적인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은 전세버스 업체를 살리고, 보조금 지급 정책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건의

## 제360회 임시회 총 45건

(3. 16.(수) ~ 3. 24.(목) / 9일간)



### 조례안 23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589	전라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장광호의원 등 10명	2022.03.24. (2022.04.07.)	전라남도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효율적 보전·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
1609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2022.03.24. (2022.04.0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정보공개수수료 내용 개정
1610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김경자의원 등 29명	2022.03.24. (2022.04.07.)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자기 계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1611	전라남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안	강정희의원 등 42명	2022.03.24. (2022.04.07.)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1612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조옥현의원 등 38명	2022.03.24. (2022.04.07.)	여성장애인이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중적인 차별을 받는 사회 환경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1613	전라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김용호의원 등 31명	2022.03.24. (2022.04.07.)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전라남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614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무경의원 등 35명	2022.03.24. (2022.04.07.)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용자인 어린이를 포함한 도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
1615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용의원 등 30명	2022.03.24. (2022.04.07.)	국토부가 국민 부담경감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개편(21. 10. 19.)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중개보수 상한 요율표 변경(매매) 6억 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하향, (임대차) 3억 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하향)위해 개정
1616	전라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곽대수의원 등 10명	2022.03.24. (2022.04.07.)	전라남도 귀어인 확대 및 성공적 정착과 전문 경영인 양성을 위한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1617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윤명희의원 등 10명	2022.03.24. (2022.04.07.)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1618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 관리 조례안	박선준의원 등 37명	2022.03.24. (2022.04.07.)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1619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22.03.24. (2022.03.3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620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22.03.24. (2022.03.3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22. 1. 13.)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162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22.03.24. (2022.03.31.)	도민의 안전을 위한 지역간 소방서비스 격차 해소 등 소방관서 신설 등을 위해 곡성소방서·구례소방서 신규 설치 및 순천소방서 담양소방서 관할구역 조정
1622	전라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22.03.24. (2022.03.31.)	도립대학교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전임교원 감축 및 소방기구 정비보강에 따른 소방공무원 증원과 직급 조정 등을 위해 개정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624	전라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2022.03.24. (2022.03.31.)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22. 1. 13.시행)에 규정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과 조례 제정으로 인수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사무직원 파견, 예산지원, 수당지급 등 원활한 지사직 인수 도모
1625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2022.03.24. (2022.03.3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626	전라남도 환경보건 조례안	도지사	2022.03.24. (2022.03.31.)	다양한 환경유해인자(환경오염, 유해화학물질 등)로 인한 건강피해 호소 증가로 환경보건 정책의 중요성 부각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환경보건 정책이 시·도지사에게 이관하는 등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631	전라남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조례안	이광일의원 등 23명	2022.03.24. (2022.04.07.)	각급 학교에서 실용영어를 담당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위해 제정
1634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국의원 등 10명	2022.03.24. (2022.04.07.)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성과계약의 체결 및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 위원회의 구성 등을 정함
1635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병대의원 등 32명	2022.03.24. (2022.04.07.)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지역의 환경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전라남도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1636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2022.03.24. (2022.04.07.)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직원의 당직근무를 위한 근거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
1637	전라남도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2022.03.24. (2022.04.07.)	전라남도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출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건의안 5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63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처리비용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박종원의원 등 32명	2022.03.1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가을부터 현재까지 전국 7개 시도, 45건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떠넘긴 살처분 처리 비용 지원과 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설치 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
1633	농업의소득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최명수의원 등 30명	2022.03.16.	농업직불금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농업의 소득 규정이 농업전반의 각종 정책에 반영되어 농업인의 영농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현실을 직시하여 입법취지에 맞게 농업의 소득 기준을 경제 여건과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
1643	무안남악신도시오룡지구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나광국의원 등 35명	2022.03.24.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시 대규모 공동주택이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 학군 등의 제한 없이 학교설립이 용이하도록 교육규제를 완화하여 학령인구 포화상태인 남악신도시 오룡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
1644	꿀벌 피해 농가 경영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조광영의원 등 36명	2022.03.24.	정부는 이번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가축재해보험 피해 보장 내용 개선, 꿀벌 입식비 및 기자재 등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
1645	실효성 있는 양파 수급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혜자의원 등 34명	2022.03.24.	정부는 단기적으로 제주지역에 한정된 44ha의 산지폐기 조치를 전남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난해 저장양파를 수매하여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가격 안정 정책을 건의

### 결의안 1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646	대통령 집무실 출속 이전 반대 결의안	이광일의원 등 48명	2022.03.2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청와대와 협의 없이 진행된 집무실 출속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이전 계획과 비용을 제시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



## 제361회 임시회 총 31건

(4. 19.(화) ~ 4. 29.(금) / 11일간)



### 조례안 15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657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지사	2022.04.29. (2022.05.19.)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기재직휴가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개정(‘21. 12.31.)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전라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반영
1658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지사	2022.04.29. (2022.05.19.)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도세 감면기한이 2022. 6. 30. 만료됨에 따라 취약 계층 배려를 위해 2023. 12. 31.까지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세 감면 조례에 개정사항 반영
1659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지사	2022.04.29. (2022.05.19.)	상위법인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조문·용어 변경)을 도세 징수 조례에 반영
1664	전라남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조례안	김문수의원 등 22명	2022.04.29. (2022.05.19.)	전라남도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 활동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
1665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춘욱의원 등 11명	2022.04.29. (2022.05.19.)	성차별 문화의 해소와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양성평등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666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광국의원 등 10명	2022.04.29. (2022.05.19.)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 명칭을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등 개정
1667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김길용의원 등 28명	2022.04.29. (2022.05.19.)	전라남도에서 지역 문화재의 계승·보전을 위해 불법으로 반출되거나 유출된 전라남도 문화재의 환수활동을 추진하거나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규범적 접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정
1668	전라남도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조옥현의원 등 12명	2022.04.29. (2022.05.19.)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신중년의 노동시장 참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 등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을 통한 전라남도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화를 위해 제정
1669	전라남도 국제개발협력 증진 조례안	조옥현의원 등 12명	2022.04.29. (2022.05.19.)	전라남도의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
1670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성의원 등 26명	2022.04.29. (2022.05.1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道 조례를 개정하고,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671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옥남의원 등 11명	2022.04.29. (2022.05.19.)	전남 청년 문화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문화복지비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시장·군수가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1672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균의원 등 10명	2022.04.29. (2022.05.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충을 가속화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673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강정희의원 등 14명	2022.04.29. (2022.05.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제정
1680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신의준의원 등 10명	2022.04.29. (2022.05.19.)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예술인의 업적을 기리고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관리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진흥 기여를 위해 제정
1686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2022.04.22. (2022.04.25.)	‘전라남도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확정안 제출에 따라 시·군의회 선거구 조정을 위해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66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 소재 구 인재개발원 토지 및 건물 매각)	도지사	2022.04.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흙 인재개발원」으로 활용하였던 「광주광역시 북구 매곡동 238번지 등 6필지 40,099㎡, 토지와 건물 「5동 지상 1~3층 9,409㎡」를 일반인찰로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1662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 점암면 소재 도유림 교환)	도지사	2022.04.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도유지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산128-6번지 등 8필지 3,236,006㎡」와 군유지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산98-1번지 등 3필지 4,460,409㎡」를 상호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1663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암군 대불국가산단 배후 주거단지 인접 도유지 교환)	도지사	2022.04.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도유지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1706-1번지 등 3필지 10,538.1㎡」와 군유지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338-3번지 1필지 3,306.1㎡」를 상호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 동의안 5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653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 체험원 설립 동의안	교육감	2022.04.29.	목표를 비롯한 인근 섬지역 및 농어촌 소재 유아들의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실내체험영역과 더불어 숲, 자연과 교감 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숲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자연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유아체험 공간 설립 동의
1660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순천시방서 왕조119 안전센터 재건축)	도지사	2022.04.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를 「순천시 조례동 1600-2번지 660㎡(순천시, 무상사용), 토지에 건물 「1동 지상 3층 940㎡」 규모로 2024년 6월까지 재건축하여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 건의안 1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681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 대책 촉구 건의안	최명수의원 등 22명	2022.04.19.	정부는 배합사료 가격 안정화와 축산 농가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료가격 안정기금을 조성하고 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금리를 낮추고 상환기간도 연장해 줄 것을 건의

## 제362회 임시회 총 19건

(6. 14.(화) ~ 6. 21.(화) / 8일간)



### 조례안 4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687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지사	2022.06.21.	'인권영향평가' 도입 전 평가주체·대상·방법·시기·소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신설로 자치법규 대상 시범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699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 지원 조례안	정옥남의원 등 10명	2022.06.21.	전라남도의 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한 전라남도 사회단체 연합회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
1700	전라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현창의원 등 10명	2022.06.21.	개인서비스업 물가안정을 위하여 지정·운영 중인 착한 가격업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하고자 함
1703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2022.06.14. (2022.06.30.)	공직선거법 개정('22.4.15.)으로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수가 61명으로 조정되어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된 정수에 맞춰 배치

### 건의안 1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705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	최명수의원 등 17명	2022.06.21	정부는 농어민 공익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모든 대한민국 농어민에게 공명정대한 공익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촉구

### 동의안 4건

의안 번호	의안명	제출자 (발의자)	의결일 (시행일)	주요내용
1692	2022년 제1회 추경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출연 동의안	도지사	2022.06.21.	지역의 산업·고용 생태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발굴·확대를 위한 일자리전담부서 신설 필요 및 일자리전담부서 인건비 및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지원
1693	2022년 제1회 추경 전남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도지사	2022.06.21.	새정부 국정과제 및 부처별 시행계획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23년 단기 및 중장기 대형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추가 R&D사업 기획 재원마련
1694	2022년 제1회 추경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2022.06.21.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에너지 유관기관의 에너지신산업 실증 지원을 위해 연구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에너지신산업 상용화 프로젝트 추진
1701	2022년 제1회 추경 전라남도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2022.06.21.	최근 코로나19 완화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민간 대표 체제 이후 기존 사업 외 5개 기금 사업,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하여 전남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으로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

※ 더 자세한 의안 정보는 전라남도의회 누리집(<https://www.jnassembly.go.kr>) <의안정보>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남의 신성장 미래먹거리 도자산업 적극 육성

2022. 02. 09.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나광국 의원(무안2)

전남의 신성장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도자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복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도자문화산업의 새로운 중심지 무안 출신 나광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내 최고 전통과 최대 규모의 생활도자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전남에 그 명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도자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전남의 신성장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도자산업을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자산업은 국가 브랜드 맵에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국가브랜드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전통문화 산업과 제조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지역특화 고부가가치형 기술 집약 산업입니다.

우리 전남은 예로부터 도자문화와 산업이 발달한 도자의 고장으로 찾간과 다관 등 분청사기 역사성이 두드러진 무안과 시유도기 발생지 영암 그리고 청자 중흥기를 견인한 청자도요지 강진과 국내 최초 환원백자를 생산한 목포 행남자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흐름과 환경적 배경 속에서 꾸준한 도자산업을 유지 발전시켜온 명실상부 도자생산의 최적지입니다.

이는 바로 전남에는 도자의 고품질 핵심 원료인 점토, 납석, 도석과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 양질의 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제도, 성형, 제형, 전사지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생산 전 공정 일관체계와 기계설비를 갖추고 있어 도자생산 전주기 산업 기반이 탄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남지역 도자산업 관련 업체는 총 180개로 무안·목포가 62개, 강진 37개소로 주로 무안·목포·강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 10인 이상 도자업체는 전국의 55%, 전남의 80% 이상이 바로 무안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이전은 이미 17년 전인 2005년에 전국 최초로 도자특구로 지정되어 도자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돼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이천도자예술마을을 포함한 도예촌 정비사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건립, 도자재래시장 정비 등 도자도시 이미지사업 등 도자·공예산업의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서 도자문화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은 도자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도자산업의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문화예술적인 측면에 국한되어 협소한 시각에 머물러 있어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전담부서 하나 없이 문화예술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자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조업 전 산업군에서 생산유발계수가 대체로 높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는 도자산업 대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자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전남에서 제조와 문화가 융합된 신성장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도자산업을 인식하고 전통계승은 물론 혁신기술 결합으로 고부가가치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첨단 세라믹 소재와 융합형 기능성 소재 개발 등 도자산업의 실질적 육성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남 도자산업 실태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산업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도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지만 국내 수요에 비해 중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수입 제품의 의존도가 높아서 해외 도자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강점인 전통문화와 제조를 융합한 첨단 세라믹 소재 및 기술 활용 도자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도자산업을 전남의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청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남 소재 해양·수산계열 고등학교 학과 신설

2022. 02. 09.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최무경 의원(여수4)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구복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한 전남 소재 해양·수산계열 고등학교의 학과 신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선박과 해양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우수 인재를 조기에 영입해 해양경찰 업무 발전은 물론 해양·수산 분야의 우수 인재에 대해서 경찰청이 올해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신입생들이 그것의 기술을 연마해서 해양 경찰에 입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졌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1군데 해양·수산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있는데 전남에는 완도수산고와 여수해양과학고, 신안해양과학고 등 3개소의 학교가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경력채용 요건을 선박운항 관련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전문교과 중 선박운항 관련 과목을 50% 이상 이수한 학과 및 해기사 5급 이상 필기시험 합격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전국 11개 학교 중 해양·수산계 고등학교 9개 고등학교, 학과로는 28개 학과 중 16개 학과로 타 시도의 경우 모든

해양·수산계열 고등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남은 완도수산고등학교를 제외한 여수해양과학고와 신안해양과학고의 경우 관련 학과가 없어 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 학교 재학생들은 응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수산계 고등학교를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고등학생 경력채용에 도전할 수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 정부는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고졸 취업자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직업교육 내실화 및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전남도 해양과학고가 있는데 여수해양과학고하고 신안해양과학고에는 관련 전문학과가 없습니다. 지역 인재의 공공기관 채용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도 여수해양과학고하고 신안해양과학고에도 관련과를 신설해서 우리 전남의 고교생들이 해양경찰에 응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뒤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제1의 해양수산도인 우리 전남은 어느 지역보다도 해양수산 전문인 양성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해양·수산계열 고등학교 신규 전문학과 개설이 미래의 중요 자원인 우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이고 긍정적인 견해로서는 우리 전남의 해양수산이 한층 발전되고 더불어 전남이 우리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해양을 주도하는 전남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해양경찰청이 그동안 올해부터 준비했는데 우리 전라남도의 2개 학교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도표로도 보셨지만 전국의 11개 중에서 유일하게 여수해양과학고하고 신안해양과학고만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개선되어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취업의 문과 양질의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농어촌 인력난 해소 방안을 위한 대책협의회 구성

2022. 02. 09.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문수 의원(신안1)

농어촌 인력난 해소 방안을 위한 대책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복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정론 비평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감소와 농어촌 고령화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올해도 농촌은 일손이 부족한 채 농번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 호소를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농민들은 새해가 되면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할지, 과연 올해 판로는 안정적인지, 힘들어 지은 농작물을 제때 제값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영농계획을 세우느라 마음이 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큰 걱정거리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을 비롯해 농가 경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문제는 바로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이촌향도에 따른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지금 우리 농어촌은 고령의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짓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족이 감당 가능할 정도로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상당수의 농가가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정부는 농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2021년 6400명보다 1600명 많은 8000명을 배정해 농촌 일손 가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농촌일손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써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정상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인 것입니다.

전남도 농촌지역은 가구 수 및 인구감소와 더불어 65세 이상 고령농 비율이 2015년 45.9%에서 2019년 5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원예나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발작물을 대상으로 한 농업비중이 높지만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일 평균 임금 단가 상승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일일 평균 임금은 지난 6월, 평년 10만 원에서 12만 원보다 6만 원 이상이 많은 15만 원에서 18만 원 약 50%에서 80%의 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늘, 양파 수확기에 접어들게 될 경우 추가 임금 상승은 물론 인력을 구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촌인력 증개센터의 내실화, 숙련된 전문인력 증개업체 체계화, 사설 인력 증개업체 횡포 방지, 발작물과 시설작물 인력 수급시기를 고려한 지원 대책, 외국인 노동자 인력 확보를 위한 지자체 협약 등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숙련도가 높은 도시 유급 인력을 효율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반장이나 팀장의 육성 지원 등 시군이나 농협 등의 공공기관이 농업 인력을 전문적으로 모집 훈련, 관리, 공급하는 관민 주도의 농업인력 증개회사

설립도 고려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지난 1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개선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제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로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도가 앞장서 시군을 독려하여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지원하고 도, 시군 협조체계 구축으로 농업의 인력지원 체계를 검토하는 등 새로운 인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3월 이후 또 다시 인력대란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가 가중될 것이며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서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남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시적 농업현장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남도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농업인들의 걱정 없이 생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시확대 공정한 입시 해결책 아나

2022. 02. 09.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혁제 의원(목포4)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구복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입니다.  
 대선 후보자님들께 고합니다.  
 표 계산 가운데 교육정책만큼은 배제해 주십시오.  
 정권획득을 위한 공약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교육공약은 후보들 공히  
 입시의 공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에서 공정이란  
 객관적인 점수화이고 이것을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 체제는 철통 보안  
 속에 한 날 한 시에 치르는 지필고사라면서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  
 니다.

이래야만 시골 가난한 집 아이가 학원 한번 가보지 못해도 악착같이 공부  
 하면 전국 수석을 차지할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이 된다고 보는 듯합니다.

서로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서민  
 들이 사는 곳을 개천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전국 수석,  
 판검사 되면 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미꾸라지로 보는 시각 또한  
 대통령의 사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를 우열이 있는 계층으로 규정짓고 상층부로 올라  
 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발상은 엘리트 의식이 팽배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관련 사건 이후 불거진 대중들의  
 분노에 편승한 대중영합주의입니다.

대학입시에서 부모의 능력을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정시 확대가 그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달리  
 수능시험이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대통령 후보들의 선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해 진로적성  
 중심의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해놓고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탄소중립과 RE100에 찬성하면서 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높이는 것과 같은 꼴이라는 것을 인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의 학부모님과 교육가족께 고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어떠한 교육정책이 과연 우리 전남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최선책인가 알고자 합니다.

지금 정치권과 여론에서 대입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서울과 지방,  
 고소득·고학력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교육격차만  
 더 크게 벌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각종 통계와 연구논문에서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고소득층 자녀의 수능 고등급 비율이 5배 높았고 고  
 학력자 자녀의 1, 2등급 비율이 20.8%인 반면 저학력  
 자 자녀는 0.8%에 그쳐 그 차이가 무려 26배에 달했으  
 며 서울대 입학생 중 강남 출신을 살펴보면 수시일반전  
 형은 5.6%, 지역균형은 2.4%였지만 정시입학생 비율  
 은 12%에 가까웠습니다. 또 다른 연구 자료에서는

정시를 40%로 늘릴 경우 강남 3구 학생이 1.5배 정도,  
 50%로 늘릴 경우에는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떠나서 학부모님 주변만 살펴보십시오.  
 전남에서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정시로 진학하는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본 의원은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대통령 후보는 대입 정책을 공정이란 미명아  
 래 신자유시대 무한경쟁으로 몰고 가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쟁이 과연 공정한 경쟁  
 인지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후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판단하기에는 대선후보들의 대입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보입니다.

공정한 대입정책을 펼치겠다는 선의는 존중합니다만  
 선무당이 사람 잡듯 교육정책이 걱정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내신준비, 수행평가, 학생부 관리하느니 차라리 예전  
 처럼 시험 하나로만 경쟁하는 게 공정하다는 생각은 제발  
 멈춰주십시오.

정시 확대에 가장 웃고 있는 층은 강남 학부모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의장 자리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2022. 02. 22.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임종기 의원(순천2)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의장 자리는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에 어긋나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조합 규약을 변경해 주십시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의장 자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합 의장 자리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있는 자리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라남도, 경자청, 순천시 각각 독립된 행정기관입니다. 각각 독립된 의결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24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해룡면뿐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룡 면민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도의원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 내 주민도 아니고 그 주민이 뽑은 대표도 아닌 오하근 의원이 그 자리를 자치해 버리면 임종기는 어디 가서 해룡 면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소송을 제기해도 각하를 해 버립니다.

임종기가 원고적격이 없답니다. 임종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답니다. 임종기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주민이고 그 주민이 뽑은 대표인데도 말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없더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본 의원이 조합규약을 개정하려고 해도 대표 발의를 할 수 없답니다. 의원 발의사항이 아니랍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도지사님께서 지방자치제도 본질에 어긋나는 조합 규약을 바꿔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2009년 때 조합규약을 변경하였습니다. 양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4명으로 말입니다.

그러하듯이 양 자치단체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을 양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도의원 4명으로 개정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면 무효입니다. 이 규약에 개정을 주도한 사람이 당시 경자청 행정개발본부장이었던 김동현입니다.

그는 지금 순천시장에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이 잘못된 규약에 따라 조합의장이 된 사람이 오하근 도의원입니다. 그도 역시 순천시장에 출마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더하여 한근석 의원은 오하근 의원 편을 들었습니다. 그 한근석 의원이 해룡면을 지역구로 한 도의원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만약 한근석 의원이 도의원이 되었을 때 순천시 다른 도의원이 조합의원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한근석 의원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런 것 바로 잡으라고 전라남도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의장 자리가 더 이상 정치 모리배들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합 규약을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본 의원이 희망하는 정의로운 사회, 살기 좋은 전라남도 아닐까요? 지사님, 조합 규약 변경 절차를 이행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합의장 자리가 정치 모리배들에 의해서 계속 정치판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도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야

2022. 02. 22.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정희 의원(여수6)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도민들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김영록 지사님께 경도의 생활형 숙박 시설 건축이 부동산 투기 우려를 낳고 있고 반드시 지역사회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 두 차례 5분 발언에서 지하 3층, 지상 29층, 11개 동, 1184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전라남도 건축경관위원회의 의결사항을 토대로 경관과 조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에셋은 총 세대 수를 13실 줄이는 수준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을 신청했고 경자청은 현재까지 건축 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지난 1월 13일 여수시의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을 1184실에서 63실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흥대만 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화면을 보며) 전남도는 여수시의회의의 경도 진입도로 관련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둔 4일, 전광판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문을 통해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의에 경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는 공문에서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은 경도 진입도로 개설 사업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진입도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미래에셋의 투자 철회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의회의는 2월 15일, 경도 진입도로 관련 추경예산 71억 여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사에 이어 두 번째로 경도 연륙교 예산을 삭감 하면서 미래에셋이 경도에 추진 중인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또한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와 여수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에 반대하며 연륙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연륙교 예산은 경도 개발과 별개가 아니라 경도 개발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고 미래에셋이 더 이상 지역사회와 지방의회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작년 10월 여수시의회 및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주최한 경도 해양관광단지사업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경관은 공공재’라고 했습니다.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차폐감 및 위압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를 하향 검토하라고 의결했던 것처럼 미래에셋의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건축 계획은 경관과 조망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래에셋이 현재 계획대로 경도에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공공재인 경관을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미래에셋은 다도해의 보석인 경도의 경관을 해치는 개발을 고집할 게 아니라 경관을 보존하고 세계적인 해양 관광단지에 걸맞은 관광테마시설을 건립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경자청은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 의결을 따르지 않은 현행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 계획을 불허해야 마땅합니다.

미래에셋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허가 신청에 대해 승인도 반려도 하지 않고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전남도도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에 대한 여수시의회와 도민들의 우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랍니다. 또한 전남도는 지역사회 의견을 존중해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리와 공매 방식 개선이 필요

2022. 02. 22.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명수 의원(나주2)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한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나주 출신 최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인해 수확기 쌀값이 불안정하여 농업인에게 실효적이고 선제적인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각계각층의 요구에 정부는 과잉 생산된 쌀 27만 톤 중 20만 톤만을 우선 매입 결정하였으나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낙찰 방식으로 무려 5만 4720톤이 유찰되었습니다.

쌀의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2020년 도입한 수급안정제도는 전년 대비 국민쌀 소비량에 대비하여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 또는 전년대비 5% 이상을 하락하는 경우 수급 상황을 감안해 매입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양곡관리법에 농림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가격 하락이 급등락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고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고 가격이 하락하거나 가격 하락이 예상 될 경우 신속히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늦장 처리로 농업인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어 본 의원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저가격을 정하지 않고 정부의 예정가격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진행되는 역경매 방식은 터무니없는 낙찰가와 대규모 유찰 사태를 만들어 시장격리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시기에 선제적이고 실효적이지 못한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은 농업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반농업정책으로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농촌 소멸을 막고 농업인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경작할 수 있도록 쌀값에 대한 최소한의 평균 가격을 보장하고 농가의 보유 물량이 우선 처리되어 유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매 방식을 개선하고 지체없는 시장 격리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유찰된 5만 4720톤과 추가격리 예정인 7만 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가격으로 시장 격리를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실효적인 대책 마련

2022. 03. 24.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민병대 의원(여수3)

사랑하는 전남도민과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민병대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져온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역할이 재평가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전라남도의 실효적인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과거 80년대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민간 공무방이 2004년 아동복지법에 따라 법제화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법제화 이후 19년째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체험, 취약계층 아동보호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라남도에는 39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용 아동의 수는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연간 약 9400명에 달합니다. 인구 비례로 볼 때 이용 아동 수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비분권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프로그램비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구조입니다.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도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은 10년 넘게 일한 종사자나 갓 입사한 종사자나 모두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개선하고자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제를 도입하거나 호봉제에 준하는 임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비교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종사자 처우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월 급여가 15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와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가진 강원도에 근무하는 종사자보다 월평균 급여가 약 70만 원 이상 적습니다. 타 지자체와의 현격한 임금 격차로 동일 노동을 하는 우리 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올해 호봉제 도입을 계획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임금 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 의지를 상실한 유능한 선생님들이 센터를 떠나고 있어 돌봄의 질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종사자들을 차별하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아이

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김영록 도지사님께 다음의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또는 호봉제에 준하는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30인 이상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조속히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인 이상 시설은 종사자 3명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워 4대 보험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지난 20여 년간 현장에서 사회적 돌봄을 책임진 지역아동센터가 국가와 도의 정책적 지원 아래 돌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인구정책에 사용하는 한 해 예산이 1,763억여 원입니다. 돌봄 기반의 아동복지시설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와 아주 맞닿은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 도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취약한 노동환경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재해 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해야

2022. 03. 24.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정희 의원(여수6)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5일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사망자는 828명,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수 대비 사고사망자 수를 보여주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사고사망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38.4%에 달합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에서 배제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전남의 사고사망자는 49명, 사고사망 만인율은 0.72로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정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산업안전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이 평균 2896개에 달한다는 언론보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또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국가산단에 중대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사고사망 만인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현실에서 전남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4월 도정질문에서 노동권익센터가 동부와 서부에 운영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상담과 법률 지원을 위해 중부출장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고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올해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2020년 5월 시행돼 2년이 다 돼 가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도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설치도 오리무중입니다.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제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 지역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홍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안전보건 관련 정책 연구, 산업안전 컨설팅과 노동안전 지킴이 양성 등을 통해 일터에서 안전과 보건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

앞서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사망자가 82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062명이나 됩니다. 산업재해로 요양한 노동자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만큼 전남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나아가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첫걸음으로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 설치도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난 산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과 육성 필요

2022. 03. 24.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경자 의원(비례)

존경하는 김한중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요롭고 살기 좋은 나비의 고향 함평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난 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과 육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춘란의 연간 거래 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이고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 이상의 애란인들이 재배·유통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aT에서 제도권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춘란은 전자경매 실시로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도시농업의 소득 작목으로 급부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남 함평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춘란의 최대의 분포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희귀·변이종 등 다양한 종류의 우수 명품이 많이 자생하고 발견되어 난의 성지로 불리고 있으며 매년 3월,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난 대제전이 열리며 한국춘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난은 예로부터 사군자의 영역으로서 선비 문화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정 집단과 특정 연령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10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난을 사랑해서 배양하고 있다면 누구나 대화의 상대가 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어 난의 매력은 취미의 영역을 뛰어넘어 문화의 장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적으로 총 36개의 춘란 단체에서 3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춘란은 한 줄기에서 하나의 꽃만 핀다는 일경일화(一莖一花)의 특징을 가진 개체로 수매과 전자파를 차단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오래전부터 귀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고가라는 세간의 인식 때문에 아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명화도 고가에 거래가 되듯이 깊은 야산에서도 발견되기 어려운 춘란명품은 화예품이든 염예품이든 그만큼 희귀성이 높고 우아한 자태까지 지녀 비싸다는 말이 무리는 아닙니다.

화훼산업이 농가의 부를 창출하고 특히 한국춘란의 산업화 가능성이 주목받으면서 그동안 고가에 거래되거나 일부 애란인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왔던 온실 시각에서 벗어나 춘란의 대중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춘란의 명품화를 위한 미래 한국 난계를 책임질 신품종 발굴과 한국춘란 종자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세계 속으로 춘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명품으로 등록된 여러 품종들의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국춘란의 최대 자생지인 함평군의 여건을 활용해 난을 관상용이 아닌 특색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과감한 지원을 통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존·육성해야 한국춘란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난은 세계적으로 약 2만 500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 자생종은 84종에 이르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난은 수년 동안 남획과 불법 채집으로 인하여 감상의 가치를 지닌 난을 이제 자생지에서도 찾기가 쉽지 않아 앞으로는 채집된 희귀종을 번식 보존시키는 일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남도가 난 문화 저변확대와 농업의 부가가치 산업으로서의 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빛원전 광역방사능방재센터 건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재평가 촉구

2022. 03. 24.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장세일 의원(영광1)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영광 출신 장세일 의원입니다.

우리 도 영광군 흥농읍에 위치한 한빛원전은 1986년 첫 상업 운전을 시작으로 한빛 제1발전소 등 3개의 원자력 발전소에 총 6기의 발전기가 있고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인 한빛 솔라파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전 중 유일하게 서해안에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동해안에 있습니다.

서해안은 동해안과 달리 평야가 많아 방사능을 막아 줄 방어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해안은 서해안에서 드물게 산악지형이 많아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건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한빛원전 광역방사능방재센터 건립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안군을 선정했습니다.

광역방재센터는 방사능 유출 등 원전 사고로 기존 영광 군서 방재센터 기능이 상실될 경우 신속히 이동해 사고 수습과 대응을 총괄하는 지휘본부입니다. 광역방재센터는 국비 1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제염실, 상황실, 회의실 등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원안위에서 부지선정 위탁을 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영광 한빛원전으로부터 30~35km 이내의 부지를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했으며 우리 도에서는 함평 해보면을, 전북에서는 부안군 진서면과 줄포면, 정읍 등 총

3곳 후보지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평가 결과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군유지를 제시하며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군수까지 유치전에 나서면서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좌향기성(坐享其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남이 애써서 이룬 성과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꼴입니다.

우리 도와 영광군은 원전 가동 이후 온배수 피해 등 각종 사건·사고에 시달려 왔으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랐습니다. 전북 부안군이 선정된 배경에는 함평군 후보지와 달리 후보지 전체가 군유지라서 사업 추진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합니다.

불과 20년 전 원전 핵폐기장 설치를 그토록 반대하고 무산시켰던 지역에 단지 후보지가 군유지라는 이유로 광역방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공정과 상식입니까? 삼척동자도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겁니다. 피해당사자를 제쳐두고 어떻게 다른 지자체와 협상을 할 수 있습니까?

영광 군서 방재센터에 합평 해보는 17km, 부안은 44km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전 사고 시 기존 방재센터와 이동성, 관할 지자체인 전남도와 영광군 등 지원 용이성이 어디가 높겠습니까? 원전이 소재한 전남보다 전북에 지휘센터가 설치된다면 효과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영광군민들의 대피장소와 정반대 방향에 지휘본부를 둔다는 것은 다수의 주민들의 안전보다 토지 보상 등 예산과 건립 편의성에 따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이에 전남도에서는 원전 인근에 위치한 영광, 함평 주민들의 안전에 중점을 둔 새 기준에 의해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후보지 선정 재평가 촉구 및 주민 안전대책 필요

2022. 04. 19.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장세일 의원(영광1)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천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 출신 장세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건립 후보지인 전북 부안군 출포면 우선협상 대상지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중점을 둔 새 기준에 의한 재평가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영광군의회와 함평군의회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도 우선협상 대상지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백지화와 재평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게다가 영광군의회와 한빛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23일 영광을 방문한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김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면담하여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과 및 예비후보지 결정 전면 백지화, 주민 안전을 최우선한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한 객관적 재평가, 항목별 평가점수 공개를 요구하며 결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지금까지도 전남도민의 정당한 요구 사항에 대해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 못 하고 우선협상 대상지 선정을 그대로 강행하여

최종 결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 시 지휘본부의 현장 대응은 도민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영광 군서면에 있는 현장방사능 방재센터에서 한빛권 광역방재센터로의 신속한 이동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지진과 해일 등 복합재난에 대비하고 영광 현장방사능방재센터의 근거리에는 부지선정 평가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영광 현장방사능방재센터와 훨씬 더 멀고 바다와 가까운 전북 부안군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에서 고리 2호기가 가동연장 절차에 돌입하면서 설계수명 만료가 2025년과 2026년인 한빛 1호기와 2호기의 가동연장 논의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노후원전 재가동은 원전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민 수용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지만 원안위는 주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광역방재센터 예정부지로 안전과 상관없는 사업추진의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북 부안군에 선정해버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라는 지역민들의 의견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안위가 지역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는 불통 행정의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안위는 우선 협상대상지 선정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추후 논의될 원전 재가동과 사용 후 핵연료 보관문제에 있어 주민들 수용성 확보에 크나큰 마찰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도에서는 한빛권 광역방재센터 후보지 선정 재평가와 더불어 방사능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자체 차원의 상황 지휘와 방사능 방재 안전체험 교육·훈련 기능을 갖춘 시설을 설치하여 신속한 주민보호 조치에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부지역본부 조직 확대 개편과 동부지역본부장 격상 배치 촉구

2022. 04. 29.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신민호 의원(순천6)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한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남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 출신 신민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7월 출범하는 민선 8기에 동부지역본부의 조직 확대 개편과 동부지역본부장 격상 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부권은 전남 전체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지역내총생산 GRDP는 5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 생산액은 91조 2567억 원으로 전남 전체 대비 91.5%를 차지하는 등 동부권은 전남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와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지닌 동부권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조직구조와 규모로는 동부권의 불균형 해소를 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입니다.

우리 도는 2005년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을 이곳 무안으로 옮겼습니다. 도청 이전은 필요했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도청이 지리적으로 서부권에 치우쳐 있고 현재 동부지역본부에 민원 업무 기능이 충분치 않아 동부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 동부지역본부는 2005년 10월 동부출장소로 출발해 환경업무와 산림업무를 이관받아 6개 부서에서 1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에 흩어진 도 산하기관을 아우르는 다목적 청사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 추가로 이전할 부서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서부지역본부에 3개 국, 2개 직속기관을 두고 43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본부장도 2급을 배치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성장 가속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부지역본부가 전라남도 제2청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전남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 근무 인원과 청사 규모 확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부통합청사의 설계가 일부 변경되어 사무공간이 당초보다 확대 설계 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90만 동부지역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 8기 조직개편시에는 GRDP, 주력산업생산액 등 경제관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동부권의 위상에 걸맞게 3개 실국 이상을 배치하고 동부지역본부의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조직인력 확대와 함께 동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남도정의 한 축으로써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동부지역본부장을 동부부지사로 격상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동부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동부지역본부 확대와 미래전략산업육성계획 등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도의회와 도민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환경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 이행

2022. 06. 14.

제3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강정희 의원(여수6)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성일 의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천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 출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환경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년간 치열한 의정활동을 통해 여수 국가산단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동부 지역의 환경 문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건립과 유해대기 측정 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지원했으며 대기 측정기록 조작 사건을 일으킨 대기업 공장장들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러 제발 방지와 환경 개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 초선의원 시절부터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으로 기업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진척이 미비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여수산단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도 확정됐습니다.

2022년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수산단의 환경범죄와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했던 기업들이 2021년 6월 또다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자행했습니다. 대형 폭발 사고는 3개월이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3건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이렇듯 이기적인 기업은 1년이 넘도록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환경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회피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입주 기업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은 점점 더 심각한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을 잃어갈 것이 자명합니다.

존경하는 김영록 지사님.

지사님의 지시로 2019년에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구성되고 2년만인 2021년 2월 권고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2년간의 논의 끝에 어렵게 마련된 권고안은 실무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한 채 1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권고안의 온전한 이행을 도정 목표로 세우시고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권고안이 만장일치로 확정된 것과 같이 그 이행도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권고안 제3항과 제4항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수행기관 선정부터 이를 관리·감독할 전문위원회 구성까지 모두의 동의를 얻어 신속히 추진해야 조사 결과도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11대 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은 의회 안에서 또 다른 분들은 의회 밖에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함께하는 공간은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임을 잊지 마시고 여수 국가산단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여러분이 아낌없이 베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안고 여수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내 이웃과 함께 시민과 함께 여수와 전남의 행복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무호남 시무국가에 대한 정의를 전라남도가 세워라

2022. 06. 21.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임종기 의원(순천2)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생태 수도 순천 출신 임종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호남 정신의 상징인 약무호남 시무국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경명, 김천일로 대표되는 임란 의병, 동학농민혁명, 한말 의병, 광주 학생의거, 여순 항쟁, 김주열의 죽음으로 촉발됐던 4·19혁명, 5·18 민주항쟁, 이한열 열사에 의해 촉발된 6월 항쟁, 백남기 선생님과 촛불혁명 이렇게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우리 호남 정신이 함께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호남 정신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첫 번째 도정질문에 호남 정신의 산물인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약무 호남 시무국가에 대한 정의를 전라남도가 세워라! 그리고 국어사전에 등재 시켜라!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가지고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던 게 저의 첫 번째 도정질문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곳은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의 꿈나무들이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학생들의 눈에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컷던 곳이 학교였고 우리 학교에서 제일 넓었던 곳이 교장 선생님실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세상, 이곳은 천장이 하늘만큼 높고 의장실은 교장 선생님실보다 궁궐 같고 교장 선생님실에는 비서 없지만 의장님실에는 비서가 한두 분이 아니고, 이런 곳에서 얻어갈 수 있는 우리 꿈나무들의 미래는 호남 정신의 상징인 약무호남 시무국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의장님 단상 정면에 초서체로 약무호남 시무국가 여덟 글자를 새겨달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여기 와서 배울 가치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첫 번째는 저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호남 정신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이곳은 생명의 땅 전남입니다. 역동하는 곳 전남입니다. 살아 숨 쉬는 곳 전남입니다.

이곳이 그저 조례를 통과시키는 통법부의 장소가 아니라 전라남도가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땅의 요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단상, 의장님 단상 앞에 약무호남 시무국가 여덟 글자의 초서체를 새김으로써 우리의

호남 정신이 영구히 되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물은 간 데 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 ▶ 제359회 임시회(2022.02.09.~02.22. / 14일간) : 업무보고, 조례안 5건, 규칙안 1건, 기타 2건, - 2022년도 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 6건 등
- ▶ 제360회 임시회(2022.03.16.~03.24. / 9일간) :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 기타 1건 -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규칙 제정 및 개정 4건 등
- ▶ 제361회 임시회(2022.04.19.~04.29. / 11일간) : 규칙안 1건, 기타 1건 -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 의사일정 협의 등
- ▶ 제362회 임시회(2022.06.14.~06.21. / 8일간) :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기타 1건 -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 개정안 2건 등



###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자치법규 제정·개정안 제안, 12대 원구성을 위한 조례안 개정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전경선)는 제359회 임시회(2.9.~2.22.), 제360회 임시회(3.16.~3.24.), 제361회 임시회(4.19.~4.29.), 제362회 임시회(6.14.~6.21.) 기간 동안 2022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 제안, 탄력적 회기 운영을 위한 의사일정 협의, 원활한 제12대 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 개정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2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실질적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의 입법 참여 활성화 방안과 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회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 「지방자치법」의 시행(2022.1.13.)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이동하고 의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근거법규 마련을 위해 11건의 자치법규를 제정 및 개정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전라남도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안 의결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 등 탄력적 회기 운영을 통해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원구성을 위해 제12대 의원정수 증원에 맞춰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늘리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 기획행정위원회

- ▶ 제359회 임시회(2022. 02. 9. ~ 02. 22. / 14일간) : 조례안 4건 -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 도세 감면안 등 처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업무보고 청취
- ▶ 제360회 임시회(2022. 03. 16. ~ 03. 24. / 9일간) : 조례안 6건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등 처리
- ▶ 제361회 임시회(2022. 04. 19. ~ 04. 29. / 11일간) : 조례안 6건, 동의안 4건 - 전라남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처리
- ▶ 제362회 임시회(2022. 06. 14. ~ 06. 21. / 8일간) :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 - 전라남도 사회단체연합회 지원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처리

### 위원별 활동 현황



김문수 의원(신안1)

#### 국도 24호선 무안 현경 - 신안 지도 구간 교통체증 해소 주문

신안군 지도-임자도를 가려면 반드시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이 구간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물류 및 서남권 관광시대에 부응하는 관광도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신안 지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교통체증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2022. 02. 11.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시)



한근석 의원(비례)

#### 도민 교육생 선발 및 열린 개발원 운영 관련 다각적인 홍보 필요

도민교육생 선발 시 시군에서 교육생을 추천받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열린 개발원 운영과 관련 셔틀버스 운영 같은 방법 등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홍보와 연구가 필요함. (2022. 02. 11.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시)



김경자 부위원장(비례)

###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체육영재' 포함 해야

'예능영재 키움' 사업에 체육 분야가 제외되어 있어 '예체능영재 키움' 사업으로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는 체육 영재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  
(2022. 02. 14.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



이보라미 의원(영암2)

### 청소년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급 기간제 직원도 포함해야

청소년기관에서 근무하는 지도사들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이 기간제 요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해야 하며 추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2022. 02. 14.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



정육남 의원(비례)

### 청소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 필요

현재 전남도에 청소년을 위한 장학제도 대부분 대상은 학업이나 재능 우수자임. 학업이나 재능 위주의 특별한 학생만이 아닌 평범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도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기를 보내고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주문함.  
(2022. 02. 16.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 시)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 » 제359회 임시회(2022. 02. 09. ~ 02. 22. / 14일간) : 조례안 2건, 업무보고 청취  
- 보건복지국 등 9개 기관 업무보고
- » 제360회 임시회(2022. 03. 16. ~ 03. 24. / 9일간) : 조례안 6건  
- 조례안 심사 6건
- » 제361회 임시회(2022. 04. 19. ~ 04. 29. / 11일간) : 조례안 3건, 부위원장 선임  
- 조례안 심사 3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 » 제362회 임시회(2022. 06. 14. ~ 06. 21. / 8일간)

### 위원별 활동 현황



강정희 위원장(여수6)

### 아동자립지원, 맞춤형 자립역량강화 절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자립 직전에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22. 02. 10, 여성가족정책관 업무 보고 시)

### 개학 앞 둔 학교방역, 만반의 준비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인데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파만파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만큼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늘리고 자가 진단키트 확보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주기 바람  
(2022. 02. 09,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시)



한춘옥 의원(순천1)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순천에 설치해야

동부권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집중돼 있고 순천 지역에서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순천지역의 종합병원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 바람  
(2022. 02. 09,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시)

### 전남산 김, 천일염 김치 우수성 홍보... 다양한 방안 강구해야

김과 천일염 김치 홍보 영상 제작했는데 으름 전남튜브 외에 SNS나 파급력 있는 홍보 수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해당 상품의 포장지에 중요사항을 표기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022. 02. 10,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시)



김태균 의원(광양2)

### 전남형 공공산부인과 개설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전남의 공공산후조리원은 3월 순천에 운영 예정인 1곳을 포함해 나주, 강진, 해남, 완도 등 현재 5개소뿐이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니 양질의 시설과 저렴한 비용의 공공산후조리원의 확대와 산부인과의 공공성을 높여 전남의 출산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로 전남형 공공산부인과 개설과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해달라고 주문.

(2022. 02. 09.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시)



최선국 의원(목포3)

### 노인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사업 필요하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일자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바람

(2022. 02. 09.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시)

### 환경미화원 휴게공간 부족, 근무여건 개선 노력 필요

격무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매우 열악하다는 방송보도가 있었음. 기본적인 근로 조건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신규 사업들을 검토해 주기 바람

(2022. 02. 10. 동부지역본부 업무보고 시)



민병대 위원(여수3)

### 날이 갈수록 운영이 힘들어지는 어린이집, 중장기 대책 마련 시급

매년 어린이집 이용 대상 아동이 5,000명 이상 감소하고 있고, 출산율이 저조하여 기존에 설립된 어린이집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많음. 도에서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증액하였지만, 현장에 요구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임. 단기적인 대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흡수 통합, 출산 정책 강화 등 어린이집의 효율적 지원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주문함

(2022. 02. 10.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



김복실 위원(비례)

### 전남 김치의 우수성, 세계시장에도 적극 홍보해야

중국산 김치가 우리 식탁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한편, 중국에서는 김치가 중국의 전통 음식인 것처럼 세계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김치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 모색을 주문함. 특히, 전남 천일염을 사용해 만든 전남 김치의 우수성과 영양성을 적극 홍보하고, 유튜브 등 홍보 콘텐츠의 다각화로 김치를 세계시장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촉구함

(2022. 02. 10.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제359회 임시회(2022. 02. 09. ~ 02. 22. / 14일간)

- 국제협력관, 기업도시담당관, 일자리경제본부, 에너지산업국, 전략산업국, 관광문화체육국 업무보고

» 제360회 임시회(2022. 03. 16. ~ 03. 24. / 9일간) : 조례안 1건

- 경제관광문화분야 조례안 심사

» 제361회 임시회(2022. 04. 19. ~ 04. 29. / 11일간) : 조례안 5건

- 경제관광문화분야 조례안 심사

» 제362회 임시회(2022. 06. 14. ~ 06. 21. / 8일간)

### 위원별 활동 현황



이현창 위원장(구례)

### 코로나19 발생 2년, 고사하는 전세버스운송업계 지원이 필요

전세버스는 버스운송사업분야 전체에서 44%를 차지하는 등 운수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전세버스 운행률은 약 80% 감소했으며, 폐·휴업 업체도 속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출도산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는 물론이고, 노선버스·택시 등과 달리 유가 보조금(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를 살리고 보조금 지급 정책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

(2022. 02. 22.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강문성 부위원장(여수2)

### 여수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주문

여수공항은 여수·광양 국가산단 등의 비즈니스와 향후 에너지전환 사업 진행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남해안남중권 관광에 시너지 효과를 내며 코로나19 극복 이후 관광객 유치에도 대비해야 하므로 전라남도, 여주시, 순천시 등 지자체가 여수공항이 국제공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

(2022. 02. 14.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시)





우승희 의원(영암1)

###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개인부담 없애야

전통을 보존하고 가치를 지키는 문화재에 대해 보수사업 시행시 전남만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하는데 전남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과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부담을 없애고 전남도의 사업비 비율을 올려,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있게 문화재 보존사업을 진행해야 함.

(2022. 02. 14., 관광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 시)



신민호(순천6)

### 문화재 환수 전남운동본부 발족 추진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정신을 새겨 우리 호남의 정체성확립을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함.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유출된 문화재를 환수하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수 있도록 문화재 환수 전남운동본부를 설립하여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함.

(2022. 04. 19,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례심사 시)



임용수 의원(함평)

### 전남 농수산물 수출 전담할 전남통상의 필요성 강조

경북통상은 전남까지 와서 사인머스켓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수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과 교육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전남은 그런 시스템이 부족함을 언급함.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을 전담할 도에서 운영하는 전문 수출기업의 필요성을 강조함.

(2022. 02. 14,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보고 시)



조국현 의원(목포2)

### 신종년 일자리 사업 확대 위한 전남도의 적극적인 의지 당부

50세 전후로 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남의 신종년들이 새로운 취업을 통해 제2의 인생 설계와 노후 준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함. 「전라남도 신종년 일자리 지원 조례」에 따른 전남도의 적극적인 정책 확대 의지를 당부함.

(2022. 04. 19,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시)



김용호 의원(강진2)

### 「전라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전라남도의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공간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2022. 03. 24, 제360회 임시회)



나광국 의원(무안2)

### 도자산업 적극 육성을 위해 전남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전남 서부권 특히 무안군은 전국 55% 이상의 도자업체가 밀집해있고 전국 도자 생산량의 6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자산업을 단순히 예술적인 부분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함.

(2022. 02. 14, 일자리정책본부 소관 업무보고 시)



신익준(완도2)

###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전남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한 예술인을 발굴하고,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 명예 예술인으로 선정이 되면 지정서를 발급하고, '명예 예술인의 집' 현판을 수여하게 된다.

신익준은 전남을 빛낸 명예 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사기 진작을 통해 전남이 문화예술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2. 04. 19,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례심사 시)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 제359회 임시회(2022. 02. 09. ~ 02. 22. / 14일간) : 업무보고 4회, 조례안 1건  
 - 소관 실국 업무보고(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조례안 심의 1건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
- » 제360회 임시회(2022. 03. 16. ~ 03. 24. / 9일간) : 조례안 2건  
 - 조례안 심의 2건(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361회 임시회(2022. 04. 19. ~ 04. 29. / 11일간) : 조례안 1건  
 - 조례안 심의 1건(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362회 임시회(2022. 06. 14. ~ 06. 21. / 8일간) : 현지활동 2회  
 - 현지의정활동(곡성군 오산면 재해복구사업 현장,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 위원별 활동 현황



최무경 위원장(여수4)

#### 전라남도 새품도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주길 당부

최무경 의원(여수4)이 2022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인구소멸위기 해결 등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새품도시사업의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 하다고 지적하며, 새품도시 활성화에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  
(2022. 02. 09, 2022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김길용 부위원장(광양3)

#### 도내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시책 마련해 주길

김길용 의원(광양3)은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전진단 실시 요구 등은 기초자치단체에 있지만, 건축물 관리점검은 도에서 자료요구, 개선명령 등은 가능하다고 본 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시책 을 마련해 재난발생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기바람  
(2022. 02. 10, 2022년 도민안전실 업무보고)



김희동 의원(진도)

#### 진도 팽목-조도간 국도 승격, 강력 촉구

김희동 의원(진도)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과 교통연수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진도 팽목-조도간 국도승격을 촉구했다.  
 “진도 접도대교가 지방도로 승격해 이처럼 기대효과가 크게 되는데, 수려한 해안절경을 만끽 할 수 있는 진도 팽목-조도간을 ‘국도’로 승격,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도용 이 될 수 있게 관광도로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팽목-조도간 국도 승격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2 02. 09, 2022년 건설교통국과 교통연수원 업무보고)



이동현 의원(보성2)

#### 도내 건설시공 현장에서 공동주택품질관리단의 운영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이동현 의원(보성2)은 2022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광주 붕괴사고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도내 건설시공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당부  
(2022. 02. 09, 2022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김기성 의원(담양2)

#### 독거노인 등 안전약자를 위한 119안전순찰대 운영을 잘해주길

김기성 의원(담양2)은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시 최근 좋은 호응을 받고 독거노인 등 안전약자를 위한 119안전순찰대 운영에 대해 격려하며,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만큼 대원들에 대 한 격려와 사기진작 프로그램 등을 강구해 나가길 당부  
(2022. 02. 10, 2022년 소방본부 업무보고)



차영수 의원(강진1)

####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되어야

차영수 의원(강진1)은 전남소방본부 2021년 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 3차례 등 좋지 않고 있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근무기강 점검이나 공직감찰을 철저히 실시 해줄 것을 주문  
(2022. 02. 10, 2022년 소방본부 업무보고)



박선준 의원(고흥2)

####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되어야

차영수 의원(강진1)은 전남소방본부 2021년 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 3차례 등 좋지 않고 있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근무기강 점검이나 공직감찰을 철저히 실시 해줄 것을 주문  
(2022. 02. 10, 2022년 소방본부 업무보고)

## 농수산위원회

- ▶ 제359회 임시회(2022. 02. 09. ~ 02. 22. / 14일간)  
-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업무보고 청취 등
- ▶ 제360회 임시회(2022. 03. 16. ~ 03. 24. / 9일간) : 조례안 2건  
- 전라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심사, 현지활동
- ▶ 제361회 임시회(2022. 04. 19. ~ 04. 29. / 11일간)
- ▶ 제362회 임시회(2022. 06. 14. ~ 06. 21. / 8일간) : 조례안 1건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현지활동

### 위원별 활동 현황



정광호 위원장(신안2)

#### 고수온 수산양식 피해 근본적 대책 마련 당부

매년 반복되는 전복, 우럭, 김 등 고수온 피해에 대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어장 관측 정보를 고령 어업인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2022. 02. 10.,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업무보고 시)

#### 해양수산분야 예산 확보 노력 당부

인공어초 설치를 위해 올해 39억8000만원, 150ha규모로 지원되는데 과거(’21. 50억원, ’20. 64억원)보다 규모가 줄어 안타깝다고 언급하며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기에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2022. 02. 09.,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시)



박종원 부위원장(담양1)

#### 도 종합쇼핑몰 '남도장터' 품질관리시스템 강화 요구

남도장터 급성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거래 활성화의 영향도 있었지만 전남도의 다양한 노력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신규 업체 발굴로 입점업체의 다양화를 꾀하고 기존 업체의 품질관리 등을 통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2022. 02. 10,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시)



최명수 의원(나주2)

#### 농번기 인력 수급 대책 마련 요구

5,6월 농번기에 농업 인력 수요가 집중되어 매년 어려운 실정하기에 지금까지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과 전남도의 인력중개를 통해 영농작업반을 고용하거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 오고 있으나 아직도 어려운 실정으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 02. 10,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시)



최병용 의원(여수5)

#### 농업기술원 결원 충원해 업무효율성 높여야

농업기술원이 영농현장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지도를 통해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유기농중심의 친환경 농업 기술 등을 개발 보급해야 하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직과 지도직의 결원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 02. 09,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시)



조광영 의원(해남2)

#### 해남 김 황백화 피해 복구·대책 마련 촉구

해남 지역에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한 김 황백화 현상이 내만에서 연안으로, 김에서 다시마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황백화 피해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또한 황백화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지정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전남도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2. 02. 09,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시)



장세일 위원(영광1)

#### 한빛원전 광역방재센터 후보지 결정 백지화 요구

방사선 유출 등 원전사고로 기존 영광 군서 방재센터 기능이 상실될 경우 신속히 이동해 사고 수습과 대응을 총괄하는 지휘본부가 될 광역방재센터가 전북 부안군 줄포면을 최종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해 이를 즉각 철회하고 영광 주민들의 안전을 중점으로 둔 새 기준에 의한 재평가를 강력히 촉구함. (2022. 03. 16 ~ 2022. 03. 24, 제360회 임시회, 2022. 04. 19. ~ 2022. 04. 29, 제361회 임시회)



이철 위원(완도1)

#### 김 활성처리제의 문제점 지적 및 대책마련 요구

김 양식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 등으로 사용되는 김 활성처리제를 정부에서는 유기산을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유기산 대신 무기산을 사용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하루빨리 효율 높은 약제를 연구 개발하여 고통받는 어업인들이 발생 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함. (2022. 02.09 ~ 2022. 02. 22, 제359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 » 제359회 임시회(2022. 02. 09. ~ 02. 22. / 14일간) : 조례안 4건  
-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 관리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
- » 제360회 임시회(2022. 03. 16. ~ 03. 24. / 9일간) : 동의안 1건  
- (가칭)전라남도유아숲놀이체험원 설립 동의안 심사
- » 제361회 임시회(2022. 04. 19. ~ 04. 29. / 11일간)
- » 제362회 임시회(2022. 06. 14. ~ 06. 21. / 8일간)

### 위원별 활동 현황



김정희 의원(순천5)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체육관의 일률적인 대여료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해야.

생활 체육인들이 코로나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시설 임대료가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금액 차이가 크게 나고 있음. 교육청 차원에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학교들간의 비교로 일어나는 민원을 해결해야함.

(2022. 03. 16, 제36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이혜자 위원(무안1)

#### 시골 거주 학생 교육을 위한 100원 택시 사업 도입해야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방과후 혹은 방학에는 학교 및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제한적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100원 택시 사업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시간과 교통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람.

(2022. 03. 16, 제360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이광일 위원(여수1)

####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 필요해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뜻깊게 생각하지만 관련 시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음. 조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2022. 03. 16, 제3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이희제 의원(목포4)

#### 목포, 신안, 영암, 무안 등 서부권 유아들의 체험시설 드디어 심의 통과!

2018년 교육위 상임위부터 시작해 임기말인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가칭)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동의안이 드디어 의회 의결을 통과함. 전남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의 체험장소로 순천에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있지만, 서부권 거주자는 왕복 4시간의 지리적 환경으로 거의 이용할 수 없어 분원 설립이 최대 숙원사업이었음. 설립 동의안 의결로 숲 놀이 체험원은 목포시 입암산 생태 근린공원 내 잔디부지에 2025년 6월에 개원 예정임.

(2022. 04. 22, 제3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 김한중 의장



김한중 의장은 김부겸 국무총리,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 1월 11일 전남 광양의 포스코케미칼 광양공장을 방문했다. 포스코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양극재와 음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 기업을 방문,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한중 의장은 1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첫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인사발령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최초로 임용권을 행사했다는데 의미가 크며,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전남도로부터 독립적인 인사권을 실행하게 된다.

### 김한중 의장



김한중 의장은 1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장협의회 2022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 지방의정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대한 17개 시도의회 의견 수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4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김한중 의장은 1월27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남시군의회장협의회와 원활한 인사운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로 각 시 군의회는 전남도의회와 효율적인 인사운명을 위해 상호 노력할 계획이다.

## 김한중 의장



김한중 의장은 1월 29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과 상가 등을 방문하며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한중 의장은 2월 8일 전남 중형 소방헬기 취항식에 참석 중간 연료 보급 없이 7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어 도서·산간이 많은 전남에 효용이 클 것으로 기대하며, 소방본부와 소방헬기 담당 직원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 전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 김한중 의장



김한중 의장은 3월 2일 한국에너지공과대 전남 나주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1회 신입생 입학식에 참석, 미래 에너지 연구와 리더 양성을 위해 2050년까지 에너지 분야 세계 TOP 10 공과대학 달성 비전 선포식에 함께하였다.



김한중 의장은 3월 30일 전남도립도서관에서 개최된 전남여성정책포럼 정기총회에 참석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성정책, 아동정책, 가족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협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기대하며, 전남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구복규 부의장



구복규 부의장은 1월1일 임인년 새해를 맞아 국립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게 헌화·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최근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에 따라 김한중 의장과 구복규·김성일 부의장, 전경선 의회운영위원장,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 등 최소 인원이 함께했다.



구복규 부의장은 1월21일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시설에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일 부의장



김성일 부의장은 5월 11일 순천팔마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0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전남 14만여 장애인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대회를 통해 체육인의 실력향상으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했다.



김성일 부의장은 5월 20일 순천팔마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전남 22개 시군 7,000여명의 체육인의 축제 한마당이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200만 전남도민의 화합과 영원한 전진을 다짐하는 스포츠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일 부의장



김성일 부의장은 6월 7일 해남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하여 새로운 해남 100년의 초석이 될 군청사 신축을 군민과 함께 축하하고, 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조성에 함께해준 모든 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성일 부의장은 6월 9일 전남도의회 4층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전남도의회간 우호 교류 추진과 상생발전협약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수여 받았으며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 이광일 의원과 수여식에 함께했다.

김성일 부의장



김성일 부의장은 6월 14일 목포 유달유원지에서 개최된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청정·힐링·안심 심터 전남'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 1억 명 유치를 통해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고 전남 관광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일 부의장은 6월 21일 도청 왕인실에서 개최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전남 도민을 위해 애써준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도민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안전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전경선 의회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2022년 1월~3월 대전(4차/1.24.), 울산(5차/2.11.), 광주(6차/3.14.)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에 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공동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문옥)는 제2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회 소관 18개 실·국·원으로 부터 2022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한 위원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계획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실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 보건복지 환경위원회



전라남도의회 민병대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전남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민병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전라남도도가 조속하게 제시해야 각 시군에서도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해결책 제시를 주문했다.

## 경제관광 문화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위원장 이현장)는 2022. 03. 30.~31. 기간동안 여수지역 현시활동을 통해 현장중심의 소통 의정활동을 추진, 여수지역 관광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여수 장도'를 방문하여 '예술의 섬 장도 문화예술 활성화 간담회'를 통해 여수시와 지역 협력사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최무경)는 2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라남도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최무경 위원장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도내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안전진단실시 요구 등은 기초자치단체에 있지만, 건축물 관리점검은 도에서 자료요구, 개선명령 등은 가능하다고 분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해 재난발생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2020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곡성지역을 방문해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제11대 의회 마지막 현지활동을 펼쳤다 곡성 선세리 일원의 '국도 15호선 화순 북 원리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현장을 먼저 방문했다. 곡성군과 화순군 경계에 위치한 이곳은 2020년 8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3.3ha 유실, 주택 5동 매몰, 사망자 5명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상임위 위원들은 집중호우에 항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한 계단식 옹벽과 배수로, 법면보호공 등을 점검하는 등 수해복구 현장을 면밀히 시찰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 곡성지사를 방문해 옥외저장시설 등의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는 3월 21일 '전라남도 해양수산물과학관'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파악했다. 현장을 살펴본 정광호 위원장은 "해양수산물과학관은 해양 수산 문화의 전승 보전 및 청소년 산교육의 장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해양수산물과학관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과 여촌관광 벨트와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교육위원회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이혁제)가 4월 18일 전라남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대학생과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대학생들에게 전라남도 청년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청년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아이디어, 제언사항 등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추진 중인 정책을 함께 살펴보는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여수·광양 활성화 특별위원회



여수·광양항 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민병대)는 1월 10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하여 새로 취임한 박성현 사장과 한담자리를 갖고 여수·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최선국 의원(목포3)은 3월 14일, 전남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 기념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최선국 의원은 탄소중립 성공의 열쇠는 블루카본에 있다며 전남의 넓은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남이 블루카본을 국가 인벤토리에 반영하고 국제적 인증을 받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경선 의원(목포5)은 올 2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개인(광역)부문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주최측은 전경선 의원이 발의·제정한 「전남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역이 주도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과 복지실현에 앞장섰다는 공적을 높게 평가했다. 전경선 의원은 “앞으로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입법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광일 의원(여수1)이 한국노총 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남본부의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날 위촉장 수여에는 박선호 전남본부 위원장, 남윤길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광일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땀 흘리는 도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 전라남도의회가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강문성 의원(여수2)은 3월 30일 예술의 섬 장도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 참석하여 장도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논의 하고 문화예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예술의 섬 장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대 의원(여수3)**은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남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민병대 의원은 전남은 경기, 서울에 이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인구 대비 이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음에도 종사자의 처우는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지적했다. 민병대 의원은 “근로이익을 상실한 종사자들이 센터를 떠나면 돌봄의 질이 악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호봉제 도입 등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무경 의원(여수4)**은 4월 22일 여수 LG화학 공장에서 여수국가산단 산업재해 대응훈련 및 예방점검 회의를 가졌다.

최무경 의원은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노후산단은 기반시설 노후화, 위험의 외주화, 지원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여수국가산단에서 정수된 국세를 여수화학합동방재센터와 소방장비 및 인력 확충에 재투자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계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월 17일 한국한센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19회 한센인의 날’ 행사에서 한센인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최무경 의원은 지난해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물리적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한센인들의 자존감 회복과 경제적·사회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최병용 의원(여수5)**은 3월 2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2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18년부터 전라남도위원으로 활동하며 의회의 입법기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민들의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병용 의원은 “지역봉사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숨쉬고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정희 의원(여수6)**은 3월 16일,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관 전국여성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정희 의원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관련 단체와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 아동의 권리 보장 조례와 전라남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임종기 의원(순천2)**이 3월 29일 순천 신대지구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구인·구직 간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칭)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플랫폼’을 개소식에 참석했다. 일자리플랫폼은 앞으로 일자리 기획·평가, 취·창업 지원, 구인·구직 민원 원스톱서비스 등 전남의 일자리 통제탑(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전남일자리종합센터와 함께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기능을 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용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할 전망이다.



**서동욱 의원(순천3)**은 3월 29일 전라남도일자리플랫폼 개소식에 참석하였다. 일자리플랫폼은 전남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끌고, 도내 구인·구직자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새로운 일자리 핵심 공간으로 29일 순천 신대지구에 일자리를 늘리고, 구인·구직 간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칭)를 해소하기 문을 열었다.



**신민호 의원(순천6)**은 4월 29일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7월 출범하는 민선8기 조직개편 시 동부권의 위상에 걸맞게 3개 실국 이상을 배치하고 동부지역본부장 격상 배치 등 동부지역본부 확대와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도민에게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명수 의원(나주2)**은 3월 21일 전남도 농축산식품국 회의실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침 등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명수 의원은 “농축산식품국에서 약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키기 위해노력하고 있다”며 “조사료 경영체와 경종농가, 축산 농가 모두 한뜻으로 함께 하여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태균 의원(광양2)**은 3월 1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남도·광양시·전남도의회·광양시의회·광양상공회의소와 함께 포스코와 포스코케미칼 본사 광양 이전과 차후 신규법인 설립 시 본사 광양 설치를 요구하기 위해 “포스코는 경영이념에 걸맞게 지역사회와 동반성장 하도록 광양을 비롯한 전남 지역사회의 상생발전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며 촉구 했다. 3월 28일 제11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의장으로 선출됐으며, 광양만권 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한 걸음 더 진보한 조합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길용 의원(광양3)**은 3월 24일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2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김길용 의원은 “제7회 우수의정대상”에 이어 다시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초심과 청년의원의 시대적 사명 그리고 도민들의 바람을 되새기며 남은 임기 동안 전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5월 12일 광양시 진상면 한국향만물류고등학교로부터 학교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김길용 의원은 그동안 한국향만물류고의 실습실 증축을 지원하는 등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김기성 의원(담양2)**이 3월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장협의회가 주최한 ‘제12회 우수의정대상’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기성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런 큰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도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창 위원장(구례)**은 지난 3월 28일 ‘구례 오산케이볼카 설치사업 실시협약식’에 참석,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구례가 지리산 관광중심지로 재도약할 기회를 맞이했다며 ‘구례 오산권역 관광 프로젝트’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선준 의원(고흥2)**이 보성소방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보성소방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방문한 박선준 안전건설소방위원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방문했다. 박선준 의원은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의원(보성2)**이 3월 12일 하천 범람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벌교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벌교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벌교를 시가지 지대가 하천보다 낮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총사업비 24억원을 들여 1km 구간 하천을 준설한다. 준설이 완료되면 벌교읍내가 침수 위험에서 벗어나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차영수 의원(강진1)**이 3월 24일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원대상'을 수상했다.

차영수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늘 낮은 자리에서 도민들의 손과 발이 되도록 노력했는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정치를 시작하며 새긴 초심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외면하지 않으며 바른길을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의원(강진2)**은 3월 16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법인·단체·개인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보라미 의원(영암2)**은 2월 18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보라미 의원은 '전라남도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조례', '전라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전남도 각 분야의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이며,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이혜자 의원(무안1)**은 무안 망운초 개교 100주년 행사에서 망운초 동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동문회 측은 "지역구 의원인 이혜자 의원은 망운초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커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혜자 의원은 "이 감사패는 망운초 미래 100년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는 동문과 지역 주민의 요청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광국 의원(무안2)**은 2022 위대한 한국인대상 시상식 조직위원회 주최로 1월 27일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2 위대한 한국인 100 대상'에서 지역경제혁신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나광국 의원은 제11대 안전건설소방위원회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 제1·4(부위원장)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섬 발전 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지역안전과 경제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세일 의원(영광1)**이 3월 24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2회 우수의원대상'을 수상하였다. 장세일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원으로 4년 동안 활동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 추진과 지역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영광 굴비 수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등에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철 의원(완도1)**이 3월 24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2회 우수의원대상'을 수상하였다. 이철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전라남도 의원으로 활동하며 의회의 입법기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민들의 현안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 처리, 제도개선 요구, 대책마련 요구 등 총 3번의 도정질문과 3번의 5분발언, 4번의 건의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김희동 의원(진도)**은 2월 18일 진도·완도지역을 찾아 붐동 작황을 점검하고 전복 가공·수출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희동 의원은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외식 수요 감소와 농산물 소비 부진으로 농업 분야 어려움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봄동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토록 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신안1)**은 2월 9일에 열린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남도가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광호 의원(신안2)**은 2월 16일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광호 의원은 “전국 최대 섬을 보유한 우리 지역 섬 주민에게 기본적 교통 복지가 보장되고, 섬을 찾는 관광객 부담이 조금 이나마 경감된 점은 큰 성과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 섬 주민과 농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3월 19일 신안군 압해읍 송공항에서 신안군수협이 운영하는 송공위판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신안군수협은 전국 수협 중 위판금액 기준 2020년 전국 6위(1865억 원)에서 지난해 전국 4위(1725억 원)로 도약했으며, 신안군 수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명희 의원(비례)**은 관산을 관흥마을 주민일동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윤명희 의원은 평소 마을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 오는 등 남다른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책으로 복지시설 확충에 힘써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마을 환경개선과 안전한 마을 여건 조성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받았다.



**정옥님 의원(비례)**은 3월 16일 전국여성지방네트워크 주최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2년 전국여성지방네트워크 의정활동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옥님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등 지원 조례', '전라남도 학교 우수 급식 지원 조례' 등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경자 의원(비례)**은 3월 24일에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애란인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온 춘란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복실 의원(비례)**은 '전라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 소재 혈액원 등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도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와 입장료 등을 감면하거나 헌혈 1회당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1만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헌혈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복실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헌혈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헌혈 편의성 증진으로 헌혈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 상황, 응급환자 수용 위한 투자 시급하다

차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강진1)



얼마 전 언론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산모가 아이를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우리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다행

히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만약 아이나 산모에게 자칫 위급한 문제라도 생겼으면 충분한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근대 자유주의 국가 이후로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적 장치로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는 당연히 생명권과 신체의 건강에 대한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반 발열환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수차례 진료거부를 당하는

등 자칫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다. 코로나 발생 이후 8월까지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발열환자 병원 응급실 수용 거부 사례는 총 2959명에 이른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1394명이었고 60세 이상으로 확대해보면 1813명이 병원에서 진료거부를 당했다.

진료 거부를 당한 환자 중에는 뇌경색 환자나 심정지가 온 환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9월에는 광양에서 50대 남성이 인근 병원의 격리 병상이 없어 기다리던 도중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순천에 위치한 의료기관으로 급히 이송된 사례도 있었다. 전남 소방본부의 '코로나 유무증상자 의료기관 수용거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광주·전남 소재 병원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 거부 건수는 총 177건에 이른다.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못 받는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단순히 발열로 인해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 운영 권고안'에 따르면 병원은 응급실을

코로나 의심환자 구역과 일반환자 구역으로 나눠 대응하고 응급실 앞에 사전환자 분류소를 설치해 중증도와 감염 위험도를 판단한 후 지정된 구역에 분리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생명이 위험한 중증환자는 코로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응급 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 지침이다.

하지만 일선 병원 현장에서는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병원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응급실에 감염의심 환자를 무턱대고 수용했다가 일반환자에게 전염되면 응급실을 폐쇄해야 하고 심각한 상황에는 병원이 폐쇄될 수 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병원의 피해로 돌아오고, 의료체계 붕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내 격리병상을 획기적으로 증설하고, 필수 장비와 그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의료진이 확충돼야 한다. 정부의 재원은 항상 한정돼 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지원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정부의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급한 대로 정부의 관계 부처와 의료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재원투자 방안과 자원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다.

현 코로나 상황을 극복해 내더라도 바이러스나 전염병 등의 위기는 언제든 가까운 미래에 다시 반복될 확률이 크다. 국가는 현존하는 위기에서 배우고 다가올 위기에 대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2022년1월2일자 광남일보)

## 국민 주식 '쌀'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호돼야

정광호 농수산위원장(신안2)



쌀쌀한 날, 따뜻한 밥 한 공기, 뜨끈한 된장국, 그리고 김장 김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춥고 배고플 때나 몸이 힘든 날에는 몽글몽글한 집밥이 그림기 마련이다. 아무리 식

습관이 바뀌고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집밥이 간절해진다. 뜨끈한 밥 한 공기는 우리에게 속과 마음을 든든히 채워준다. 그리고 뱃속이 따뜻한 밥으로 채워지면 추위도 제법 견딜만하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쌀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삼국시대부터 벼농사가 널리 퍼졌고 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식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쌀은 다른 곡식에 비해 맛이 부드럽고 담백하며,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 칼륨, 철분, 마그네슘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소화 흡수율, 단백질 이용률이 월등해 체내 생리 대사에 효과적이며 쌀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려 고지혈증을 막는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쌀을 주식으로한 문화권은 성인병 발병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쌀은 우리의 삶을 지켜낸 일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런 고마운 쌀이 요즘 찬밥신세다. 올해 388만톤의 쌀이 생산돼 예상 수요량(357~362만톤)보다 27~31만톤의 쌀이 남게 됐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보니 가격 하락은 볼 보듯 변한 일이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20kg에 5만1,826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7%가 낮은 수준이며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 최대 쌀 주산지다. 전남도, 전남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앞장서 정부 시장격리를 줄기차게 주장했으나 몇 달째 묵묵부답이었다.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생산량이 수요량을 3%이상 초과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이상 하락시 쌀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두고 보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됐다. 또 안타까운 점은 쌀 가격이 높다고 판단, 범부처 물가대응 TF관리 품목에 쌀을 포함시켜 오히려 쌀값을 낮추는 정책을 펼쳤다.

그럼 정말 값이 높은 것일까? 2020년기준 국민1인당 연간 쌀소비량은 57.7kg이다. 단순 계산하면 1년 쌀값은 14만9천원이다. 1달에 1인당 1만2천원 정도 드는 셈이다. 과연 이 가격이 가계에 큰 부담일까? 더 피부에 와

닿게 생각해보자. 음식점에 십수년간 유일하게 값이 오르지 않는 메뉴가 있다. 바로 공기밥 1,000원이다. 그런 쌀값을 물가안정 품목에 포함했는지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일까?

농업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매년 토지임대료, 인건비, 비료, 자재, 농기계 유류대 등은 상승한다. 잦은 기상 이변으로 병해충과 태풍, 집중호우로 수확량은 매년 불안정하다. 하지만 쌀값은 어떠한가? 소비자물가지수가 58% 상승하는 동안 쌀 농가 소득은 오히려 4%가 감소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즉, 쌀 농가 경영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반증이다.

옛말에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농부 손이 여든 여덟 번 가야하고, 그래서 쌀(米)자에 여덟팔(八)이 2번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농업인 노고가 있어야만 쌀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손해가 계속된다면 과연 쌀농사를 계속하겠는가? 쌀은 단순히 먹을 것 이상이며, 국민 식량안보 즉, 국민 생존권 수호 차원에 반드시 보호해야 할 중요 농산물이다. 정부는 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조속히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한편, 적정 쌀값을 유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모두

가 쌀쌀한 날, 쌀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후세에도 국민 모두 맘 편히 따뜻한 밥 한 공기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 국민을 지켜온 소중한 쌀을 지킬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이상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이 찬밥신세가 되지 않도록 말이다.

(2022년1월3일자 전남매일)

## 2022년 대전환의 시작

우승희 의원(영암1)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서부와 남부 유럽, 시베리아 지역의 잇따른 대형 산불, 서부 유럽 지역 최악의 홍수 사태, 미국에서의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피해, 북유럽과 알제리, 미국의 일부 지역 등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8년 111년 만에 찾아온 여름 역대 최고 기온(41℃)과 최다 폭염 일수(31.5일)를 기록하고, 올해는 중부지방의 경우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면서 총 54일 동안 지속되는 기록을 세우는 등 해가 갈수록 극한기상현상을 경험하는 빈도수와 정도가 커지고 있어 어느덧 이상 기후가 일상이 돼 버렸다.

유엔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글로벌감축목표 보고서’에서 2030년 탄소 배출량이 2010년 대비 16% 증가할 것이며 그 결과,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2.7도 오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보고서는 이미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피하기 위해 지구온도는 산업화 대비 1.5도 상승 이하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1.5도 상승이 마지노선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단기적인 환경요인도 있지만, 2012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특별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채택된 IPCC 특별보고서에서도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까지 기온 상승 폭이 1.5℃를 넘을 경우(파리협정에서 목표로 설정한 2℃ 수준을 포함) 많은 지역에서 극한 온난화, 일부 지역에서 호우 또는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크게 완화와 적응으로 나뉘며, 가능하다면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즉 완화 전략)이 가장 안전한 해법이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하여 전 세계는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의 전환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의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은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까지 지구평균 기온 상승 폭이 2℃ 이하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그동안 탄소 순 배출 넷제로(net-zero) 목표에 유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와 일본이 205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로 순 배출 넷제로를 선언하였고,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2022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대한민국 유치를 공식화함에 따라 전남, 경남의 남해안 남중권을 비롯해 인천, 경기 고양시, 제주도 부산 등도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는 남다르다. 발 빠르게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2050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개최 최지지로 남해안 남중권을 강조하며, 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가 앞으로 30년 후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청정산업, 청정에너지, 청정생활, 청정산림 등 4대 분야 10대 과제 103개 사업에 75조 규모를 투입해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92.4백만톤을 감축,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을 실현하겠다는 게 전남도의 핵심전략이다.

‘전라남도 온실가스 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온실가스 관리를 컨트롤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고 지혜를 모을 계획이다.

또한, 미래 녹색기술 개발 등을 총괄하는 국립그린과 학기술연구원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전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이다.

기후변화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 의식주, 안전, 자원생산, 경제 등 전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영향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2022년1월3일자 전남일보)

## 지방의회법 제정, 매우 시급하다

전경선 운영위원장(목포5)



2022년 대망의 임인년이 시작됐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 때문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해의 시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소망, 새로운 목표 등을 향해 나아가

다. 지방의회 또한 임인년의 시작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의 시행이 가진 성과와 의미,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시행이 가진 성과와 의미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왜 '지방자치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필자는 제11대 후반기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전반기와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뛰어왔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권 강화 및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등으로 획기적인 주민 주권을 구현했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으로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 및 자치권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땀질식 개정에 비해 32년 만의 혁신적 전부개정임이 분명하고, 지방의

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책개발 기능이 강화된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처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아직 집행부에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완벽한 독립이 아닌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애당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강력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진정한 주민 주권의 실현이 목표인데, 반쪽짜리 인사권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지자체 장에게 예측된 지방의회의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의회법안'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의회법안'이 올해 1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이 미처 담지 못한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담고 있기에, 국회를 통과하면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거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완성할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지

방의회의 독자성 강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회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후보자를 검증한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자체 장의 강력한 인사권에 대항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주민의 삶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해 국회처럼 검증하게 된다. 주민들이 지자체 장에게 위임한 인사권을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이 통제하게 되는 민주적 임명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지방의회법안'은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교육 방안 등을 비롯해 새로운 '지방자치법'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곳곳에 마련해 두고 있다. 두 개의 법이 마치 처음부터 한 몸인 것처럼 함께 존재해야만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가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법'의 제정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지방자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21대 국회 초반에 접수된 '지방의회법안'은 아직도 소관 상임

위에 계류 중 인체 법안 심의를 위한 별다른 진척이 없다. 이 자리를 빌려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해 지방자치는 부활 30주년을 맞이했다. 군사독재에 의해 강압적으로 중단됐던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해 어느덧 청년으로 성장한 것이다. 2022년 우리의 지방자치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를 온전히 완비하고 진정한 주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

(2022년1월6일자 무등일보)



## 주민자치 2.0시대를 기대한다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목포1)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의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과 지방의회로, 국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권한이 이전하기 때문에 자

치분권 2.0 또는 지방분권 2.0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자치경찰제’ 도입, 그리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을 진행해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실질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켰다. 또한 주민들이 조례 제정과 폐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고, 조례 청구 연령(19세→18세)과 조례 청구 등의 인원의 완화는 주민참여권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필자는 지방자치 2.0시대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실질적 주민자치’를 함께 고민하길 기대한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보면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법 개정의 주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민참여권과 주민조례 발안제,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 등 다양한 형태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 주민 사명감·역할 다해야

지방자치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와 생활자치를 이야기하면 다소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실제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든지 해야 할 사명감 등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지역의 주인인 주민으로서의 사명감과 역할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살아왔다.

필자는 작은 의미의 자치분권, 그리고 온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주민자치의 강화’, 그리고 그 방안으로 전면적인 ‘주민자치회’ 시행을 주장한다.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0년 법적 근거를 확보한 이후 2013년부터 전국에 시범운영 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297개 읍·면·동 중 6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행 초기 주민의 참여부족과 자생조직간 소통부족,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한 예산과 인적자원의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지역 유지들이 주민자치회에 다시 모인

다는 자조 섞인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업무와 계획의 심의,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이해, 풀뿌리 자치 활성화 등 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 그리고 지역의 현안을 주민총회를 통해 직접 묻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해낸다.

2021년 순천시의 경우 기존 8곳에서 24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였고, 해남군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전면 시행으로 전환하였다. 시행 초기 갈등과 반목으로 인식되었던 주민자치회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생활자치와 화합의 장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들이 기적의 도서관과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었고 평생학습도시라는 타이틀을 갖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으며, 외국의 경우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넘어 도시가 다시 활력을 갖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획일적 기준으로 해결 곤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생활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행정기관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결정하고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은 주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일방적, 획일적인 접근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다양한 시도와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방분권 2.0’시대를 맞아, 이제는 주민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 2.0’ 시대도 함께 오기를 기대한다.

(2022년1월13일자 전남매일)

## 체험에서 힐링까지...매력있는 도시 화순

문행주 의원(화순1)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융복합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한 것이다. 바로 6차산업이다.

6차산업의 출현으로 단순재생산에만 그치던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업의 새로운 혁명이라 할만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농업을 저부가가치산업, 전통산업, 재래산업으로만 인식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옛말이 됐다. 오히려 농업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화순 능주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포프리(fourfree)이다. 애초 무항생제 계란 생산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현재 계란 두부 콩나물 쌀 두유 등을 20만여 가정에 공급하는 친환경 식품기업이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단순히 식품만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장과 사무실이 있는 부지에 2만평 규모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해 6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건물은 박스형 공장식 건물을 탈피해 조형미를 갖춘 카페 같은 건물로 밤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화려하게 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잡아끌고 있다.

회사 경내를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무시로 산책하며 멋진 공간을 감상하고 힐링을 하는 명소가 됐다.

여기에 공장부지 옆에 청보리밭을 조성하고 스킨웨딩 장소도 만들어 100동 규모의 클럽핑장과 공간대관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공장이 단순히 제품을 제조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발전해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 5분만 가면 두베이 커피연구소가 있다. 세계 유일의 스마트 커피농장이다.

커피의 재배, 가공, 교육, 판매가 이뤄지는 곳으로 파프리카를 재배하던 유리온실을 개조해 커피농장으로 바꾼 성공적인 농업혁신 사례다.

주변에 조성된 커피숍과 브런치 카페 등이 생겨나면서 벌써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포프리에서 조금 떨어진 읍내에는 500종의 꽃과 식물이 자라고 있는 제9호 민간정원 허브트랙이 있다.

화순은 73%의 산림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산림휴양도시다. 화순전남대병원 암전문병원으로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종합병원이고 여기에서 반경 10km 내에 5개의 대학병원과 대형 종합병원으로 이뤄진 의료벨트는 전국최고의 치유의료산업단지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곳이다.

환자들이 치유와 휴양을 통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고의 적지가 화순이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인류의 건강이 위협받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화순이야말로 생물의약 산업단지에서 백신과 신약을 제조하고 최고 의료기술로 치료받고 무등산과 만연산 일대의 산림치유단지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최대의 치유와 힐링공간이다.

인근에서 생산하는 건강한 농산물을 포프리에서 메디푸드로 개발하고 주변의 산림단지와 최고의 치유 요양 시설을 갖춘 메디텔을 유치해 첨단의료복지가 어우러진 21세기 치유도시로 자리잡아 나가야 한다.

이를 상호간에 조화롭게 결합시키고 보다 젊은 감각으로 발전시켜 농업을 1차산업에서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끌어올려 매력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농업을 치유의료와 결합해 새로운 문화산업으로 선도하는 화순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2022년1월18일자 전남일보)

## 물때력(潮汐曆)의 체계와 현대적 활용의 혼란

나광국 의원(무안2)



벤틀사람들은 '판장 아래 지옥'이라는 말로 바다 생활을 표현한다.

바다는 풍요의 공간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공간이라는 말이다. 물 반 고기 반이라도 바다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바다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바다의 환경 지식으로 조석에 대한 물때 지식은 바다 지식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때의 본래 뜻은 조류의 세기를 숫자로 등급화한 것인데 조류의 변화로 발생하는 조석간만의 차, 좀 더 쉽게 말해 바닷물의 주기적인 변화를 '물때'라고 한다.

바다가 생업 공간인 어민들은 바로 이 '물 때 따라' 바다로 나가고 육지로 돌아온다. 이러한 '물때'는 민속 지식으로 전승됐고, 바닷사람들은 이 '물때'를 세어가면서 조류의 주기를 예측했다.

특히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조류를 이용한 고기잡이 어법이 발달했다.

안강망·낭장망·덤장 등은 조석간만의 차가 큰 '사리' 때를 중심으로 어로 활동을 하고, 유자망·주낙·건작망 등은 조석간만의 차가 작고 물살이 약한 '조금' 때를 이용한다. 주민들의 생활도 조류의 주기에 따라 변화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물때 지식은 섬사람과 바닷사람들의 삶에 중요한 역법으로 작용하면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물때(조석)에 대한 우리나라 최초 기록은 고려 후기 이규보의 '축일조석시(逐日潮汐詩)'로 알려져 있다. 고려 시대에도 조석간만의 차를 인지하고 음력 날짜에 따라 구체적인 시간대까지 계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물때를 역법으로서 15일 단위의 순환형 조석표로 온전히 기록한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 확인된다. 조선 후기에 기록된 서해안과 남해안의 물때력(潮汐曆)은 현재까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 채 지속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때 체계는 '7물때

식'으로 불리는 서해안형과 '8물때식'으로 불리는 남해안형이 병존하고 있다. 음력 초하루의 물때를 서해안에서는 7물로 세고, 남해안에서는 8물로 세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의 물때 체계가 현대적 활용에 있어 혼돈을 드러내고 있다.

민속 지식으로서 물때력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한 학자의 판단으로 6물때식 제안이 있자, 조석을 관찰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기존의 7·8물때식 표기와 더불어 6물때식 표기까지 기입했다. 동일한 지역에서 3가지 물때표기를 기입하는 복잡한 체계가 돼버린 것이다.

기존 7·8물때식에 6물때식 병합 표기는 현지 주민들이 사용하지도 않고 과학적인 타당한 근거도 없이 국립해양조사원이나 관공서를 통해 공식화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물때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규격이 마련돼야 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예보표는 7물때식과 8물때식의 물때 체계가 명확하게 구획되는 점을 고려해 명칭을 제공하고, 지역별 물때 이름과 체계를 촘촘하게 조사해 세부 권역별 물때 이름과 함께 필요에 따라 현지 명칭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해양수산부해양문화연구총서 '섬과 바다의 전통지식 2020', '2021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심화연구(목포대 산학협력단 도서문화연구원)

(2022년1월24일자 전남일보)

##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해야

장세일 의원(영광1)



최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건물 붕괴사고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그동안 수많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떨

쳐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광주 사고는 수개월 전부터 사고 징후가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부실 시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책임감리제와 함께 레미콘 타설·배양 등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설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배양의 리스크가 커 외부 기온이 4℃ 이하면 겨울철 전용 콘크리트인 한중콘크리트를 사용하고 난로나 온풍기 등의 양생 장치 설치 후의 온도가 보통 5~20℃ 정도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촉박한 시공일정에 맞춰야 하고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지는 건설 현장 관행상 안전 수칙은 종종 무시되게 된다.

화정 아이파크 35~39층 타설 양생기간동안 무려 55%를 차지하는 40일 중 22일이 최저기온이 영하였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뼈대 역할을 하는 철근이 콘크리트에 제대로 붙지 못하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작업자들의 생사확인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위험천만한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남에도 레미콘 업체들은 가격 담합행위를 지속하며 자기 잇속만 챙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레미콘 시장에서는 제품 특성상 자유로운 경쟁이 어렵고, 시장 참여자는 제한적이며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워 담합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무풍지대에 놓여 있다.

레미콘은 제조한 후 굳기 전까지 60~90분 안에 운송해야 하므로 공사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소재한 사업자들만이 공급할 수 있어 경쟁을 할 수 있는 참여자는 한정적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가격담합과 레미콘의 품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며 나아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제2의 성수대교' 사태 등도 이미 수차례 발생한 바 있다.

을 담은 특별법 제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2022년1월26일자 전남일보)

불량 레미콘을 쓴 아파트는 사후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시멘트량을 줄이고 혼화재를 넣으면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늘어나야 하지만 건설사들은 기존 공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하자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날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이 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상존한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등은 당분간 중대재해법을 당분간 적용받지 않아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하며 건설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

## 주민자치 2.0시대를 기대한다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목포1)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초광역 협력'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정부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지역 뿐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초광역협력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협력이란 행정구역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자치단체 간 융합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아가 거대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의미한다.

수도권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의 광역권 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획일적 방식으로 추진돼 지속추진에 한계가 있었지만 초광역협력사업은 지역이 먼저 움직였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부산과 울산, 경남이다. 광역지자체인 부산과 울산, 경남이 힘을 합쳐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논의가 활발한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이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한 후 광역교통망사업 등 핵심사업들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해 말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양 지자체 간 행정 경계를 넘는 여러 청사진을 구상하며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생활권 육성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양 시·도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전남'을 목표로 △빛고를 스마트 메가시티 △광주·전남 상생발전구상 △호남권 초광역에너지 경제공동체 등 초광역협력 사업을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 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은 보이지 않고 단지 선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빛고를 스마트 메가시티는 광주와 인접한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등 전남 5개 시·군을 아우른다. 이들 지

자체는 스마트 기반구축, 친환경 자동차 등 신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과 교육·의료기반 구축, 문화·관광·레저 사업 공동 추진 등에 뜻을 모았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통합 서비스 체계를 갖춰 젊은층을 유입한다는 게 밑그림이다.

광주·전남 상생발전 구성에 대해 지난해 10월 양 시·도가 협약을 체결하고 경제통합·행정통합·특별자치단체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호남권 에너지경제 공동체 구축은 2034년까지 호남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2050년까지 추가로 재생에너지 200%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후 초과 생산 분은 최대 에너지 수요처인 수도권 등에 판매하는 것으로 에너지 자립과 초과 판매 분에 대한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호남권 에너지경제 공동체 구축 프로젝트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군공항 이전처럼 정치적 논리에 따라 협력에 부침이 있어서 곤란하다.

대선결과에 따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이 결정된다. 우리지역의 명운을 걸고 광주와 전남 양 시·도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심정으로 초광역협력에 나서서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각 당의 대선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2022년2월2일자 광남일보)



## 농어촌 빈집, 구체적 활용방안 시급하다

김성일 부의장(해남1)



농어촌 지역은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갈수록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빈집증가는 전남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공통문제이다.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농촌에 방치되거나 관리되지 못한 빈집은 지역 사회에 각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흉물화 돼 가고 있다. 화재 붕괴 위험, 야생동물 출입, 쓰레기 투기, 우범 장소화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농촌 경관까지 훼손하는 각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라도와 전북도의 빈집 발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22개 시군의 빈집은 2018년 8,399곳, 2019년 1만1,359곳, 2020년 1만4,727곳, 2021년 1만9,471곳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빈집 발생 요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에 따른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상숙문제, 차

후 고향에 돌아와 살고 싶은 의향 등 다양하다.

2021년 전남의 빈집 1만9,471곳 중에서 철거해야 할 빈집이 67%, 활용 가능한 집이 32%로 철거대상 빈집이 훨씬 많다.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경관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동의한 비율은 매우 낮다.

정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위해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 등의 강제적인 조치는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현장에서는 거의 집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빈집정비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가이드라인 마련 보급 등 정책 추진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 대

해서는 농촌 지역개발과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빈집 정비를 추진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염두에 두고 빈집 또는 철거 부지의 종합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또한 사유재산인 빈집을 법으로 강제하여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농어촌정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빈집활용에 동의하는 건물주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환경개선을 위해 농촌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 집행이 쉽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2월4일자 전남매일)

##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목포1)



20대 대통령 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진영에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기회의 공정을 바라는 젊은 층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

그리고 기득권과 젠더갈등 등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20·30대를 잡기 위한 공약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더해 지난해 4·7 재보선을 통해 분출된 LH 문제와 실망감, 그리고 서울·수도권의 부동산값 폭등 문제 해결 방안은 모든 후보의 1순의 공약이 되었다.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진영에서는 수도권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수도권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이러한 정책에 의문을 가진다.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나타나는 문제들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고 또 정부와 정치권에서 수

도권의 주민들을 의식하면서 문제를 키웠을 때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 수도권 표심 공략 예산 편성

정부와 정치권은 전국 단위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대한 해결을 강조해 왔지만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지역소멸대응기금 1조원과 국고 보조사업 2조 5600억원이라는 미미한 예산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11조 4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표 때문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은 알고 있지만 수도권의 표심은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대 대선을 맞아 수도권 초집중화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친다. 지역소멸위기 해소와 수도권 일극화로 인한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국토균형발전이다. 지역은 이미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수많은 삶의 부문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이 사람들을 수도권으로 모이게 한다.

100대 기업의 91%, 교육·일자리·의료 등 각종 시설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면서 정부의 재정 투자 또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말은 선언적 구호에 그치고 있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번번이 걸러졌다. 경제성을 중시하는 기준, 미래를 보지 않는 근시안적 기준의 투자심사 때문이다.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모든 후보들의 입에서 이번처럼 많이 회자되었던 선거는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충청권 행정수도’와 공기업 이전 등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의 노력을 시작한 이후 20대 대선의 모든 후보들이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영남과 호남, 제주를 묶는 남부수도권 공약,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서울대 이전,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등 지역민의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심지어 소멸위기지역의 균형발전을 놓여온 기본소득과 직불금 등 시혜적 공약으로 해결하겠다는 일부 후보의 인식은 안타까움마저 느껴진다.

###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국토균형발전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이다. 시혜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지방은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수도권은 폭발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을 바라보는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지방에 대한 투자는 ‘혁명적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기업 몇 개, 공기업 몇 개를 지방에 내려 보낸다는 인식은 곤란하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준비했던 것처럼,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재정확보 방안조차도 마련하지 않은 공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지방과 수도권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는 삶을 누리는 실질적 균형발전의 토대가 2027년에는 꼭 만들어 지길 희망한다.

(2022년2월10일자 전남매일)

##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개조 해야

최병용 의원(여수5)



전남 여수시 삼일동에 위치한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종합 석유공업기지이다. 거대한 석유화학 단지로서 단일규모 세계1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호남정유의 기공식을 시작으로

1977년 남해화학의 비료공장 조성 등 14만 평의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들어서 있다.

이 지역이 중화학공업단지가 들어선 이유는 단지 평균 고도가 100m이하로 공업단지 조성에 유리한 지형 조건이라 한다. 특히 항만 조건에서 중흥부두 동남부의 묘도와 여천반도로 둘러싸인 협소한 수역이기는 하나 묘도의 북부 수심은 20m나 되고 묘도 남부항구에 이르는 부분은 수심이 14m 이상으로 8만급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 광양만 일대는 방파제가 필요 없는 지역으로 대형 선박의 출입이 좋은 항구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 외에도 여수시 일대의 약 3000만 평의 광활한 간석지와 섬진강의 공업용수 확보 용이, 호남화력발전소와 여수화력발전소도 한 몫을 하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여수국가산업단 입주업체는 석유화학 133개, 기계 86개, 비제조 45개 업체 등 296개 업체로 2만5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생산실적은 68조3284억 원, 수출실적은 278억7800만 달러이다.

대표적인 석유화학제품인 에틸렌의 경우 연간 약 350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약 730만톤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양이며 석유화학산업의 에너지 비용 또한 연간 5조 원 규모라고 한다.

이렇듯 대한민국 산업화에 혁혁한 공을 거두고 있지만 과(過) 또한 크다. 몇 년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작 사건도 발생 한 바 있으며 산업현장 대형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번 여천NCC 폭발 사고는 열교환기 압력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사고이다.

심지어 이번 폭발은 안전관리 분야에 자격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

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하청업체 관리의 문제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보여진다. 노동계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죽음의 외주화'가 잇따른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산단의 안전불감증 사고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64건으로 인명피해만 40여명이며 지난 50년간 386건, 사망자만 150여명, 부상자는 270명에 이르고 있다.

입주기업들 대부분은 유독가스인 포스젠을 비롯하여 황산, 암모니아, 염산, 질산 암모늄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어 대형 사고 발생이 높은 현장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필요한 곳이다.

이에 필자는 여수산단의 산업현장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에서는 노후산단을 산업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스마트 산단으로 리모델링화 해야 하며 입주기업들은 노후화된 시설부터 교체하고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죽음의 외주화'를 없애야 한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시 단순히 현장소장이나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고 원청이나 사업장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지자체에서도 관리, 감독 등 단속에 참여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주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셀프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국가, 지자체, 기업,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대책 및 대기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수립되기를 기원한다.

(2022년2월16일자 광남일보)

##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선공약화 해야

최명수 의원(나주2)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공공기관 이전 확정 발표가 사실상 힘들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연설을 통해 “122개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희망찬 계획을 내놓았으나 지난 3년 동안 논의만 하다 좌절된 것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지만 여야 유력 후보들은 공공기관 2차 이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공약화하고 있지 않다.

광주·전남은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 계획으로 나주 금천·산포면 일대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추진했고, 한국전력공사, 한전 KPS 등 에너지기관 4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유통공사 등 농생명기관 5개,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보통신분야기관 4개, 한국문화예술회원 등 문화예술포럼 분야 기관 3개 등 4개 분야 16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 혁신도시 인구는 2021년 9월말 기준 3만 9000여명, 공공기관 임직원 7,885명이 상주

하고 약 400여개 기업을 유치해 1만 3000여명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등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 1차 지방이전의 인위적인 분산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대치와는 달리, 수도권, 충청권 인구 집중 현상이 재발되는 이유는 교육·의료·문화·복지 시설 등 정주 인프라가 미흡한 측면도 있었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시 지역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연구기관으로 인한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미흡, 기업가적 혁신 생태계 조성이 이뤄지지 못한데 기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즉, 한국전력공사는 나주에 있지만, 한전 산하 기관인 인재개발원은 서울에 있고, 전력기금사업단은 서울 영등포, 자재 검사처는 경기도 의왕시, 전력연구원·설비진단처는 대전 유성 등에 위치하고 있어 마치 몸은 지방에 있지만, 팔다리는 수도권 등에 남아 유기적인 연결체로서 역할을 못하는 기형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도 본사는 나주에 있지만, 산하기관인 농어촌연구원은 경기도 안산에, 인재개발원과 농어촌자원개발원은 안양에, 안전진단사업단은 대전 서구에 두고 있어 상호간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이전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설립한 잔류 부속기관과 자회사, 출자회사가 326개에 달한 만큼 이에 대한 지방이전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은 읍면동의 85%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시골마을엔 청년은 찾아 볼 수 없고 농촌은 고령화로 농업 생산력은 떨어지고 코로나로 지방 제조업의 위기가 지역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인구마저 유출되고 있다.

인구는 해당지역이 살아남느냐, 남지 못하느냐를 판단하는 매우 소중한 지표이자 경제적인 측면과 연결된 지역현안이 돼버렸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공공기관 1차 이전에 미처 하지 못한 잔류 부속기관과 자회사, 출자회사에 대한 지방이전을 완료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100년, 200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은 인재가 모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곳으로 새롭게 변화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과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미뤄서는 안된다.

(2022년2월18일자 전남일보)



## 고효율 김 활성처리제 연구 개발 급하다

이철 의원(완도1)



국민 누구나 좋아하는 김은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도 수산물 수출 1위(6억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남의 김 생산량은 전국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김양식 어민들이 김활성처리제로 무기산을 사용해 단속됐다는 안타까운 보도를 간혹 접하고 있다.

김 활성처리제는 김 양식장에서 잡초 제거, 병해 방제, 성장 촉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김이 양식되는 동안 파래, 매생이, 규조류 등 이물질이 달라붙어 김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꺾병이 발생해 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처럼 김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과거에 무기산을 활성처리제로 사용했으나 정부는 국민 정서와 해양생태계 보존 등을 감안하여 무기산 사용을 1994년부터 금지하고 있다.

대신 정부는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김활성처리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무기산 사용을 막기 위해 단

속과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유기산 활성처리제 구입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산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럼 왜 김 양식어장에서 무기산이 사라지지 않고 김활성처리제로 사용되고 있을까?

이는 현재 사용 중인 김 활성처리제는 효능, 가격, 작업효율 모든 면에서 무기산 보다 떨어져 어업인들이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산과 같은 효과를 내려면 사용량의 3배에서 8배 이상 늘려야 하고 작업시간 또한 5배 이상 소요된다.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가격 또한 무기산은 평균 20ℓ 당 9,000원 수준인 반면, 활성처리제는 1만7,000원으로 같은 양 무기산 대비 유기산 활성처리제 가격은 1.4배에서 1.9배 정도로 높아 상당한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불법 무기산 사용으로 인해 사범 처리되는 어업인은 늘고 있고 해양환경에 나쁜 영향도 발생하고 있는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 활성처리제 종류의 추가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김 양식어장 환경을 보호하고 김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4가지의 활성처리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유기산, 전해수, 영양물질, 고염수 활성처리제이다.

문제는 현재 개발된 활성처리제가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김 양식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산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2020년)를 보면 알 수 있다. 산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활성처리제는 무기산 29%, 유기산+무기산 혼합 28%, 유기산 21.5% 순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조사결과 또한 유기산 활성처리제 불만족이 56%로 만족 18.6% 보다 월등히 높았다.

종합해보면 기존 활성처리제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활성처리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무엇보다 유기산을 쓰며 안전한 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김 양식 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불법 무기산 사용은 철저히 근절돼야 한다.

다만 불법 무기산 사용이 해마다 적발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단속이나 홍보강화조치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

을 말해준다.

이에 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전남도 행정기관과 연구기관의 관계자들에게 하루빨리 효율 높은 김 활성처리제 연구 개발을 요구해왔다.

다행히도 올해 전라남도에서는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과 함께 신규 김 활성처리제 후보물질과 부가장치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농업분야에서는 다양한 농업약제가 개발되었고 그 비용도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김 생산 어업인들도 김 활성처리제로 효과는 탁월하지만 여전히 거부감이 있는 무기산을 대체할 약제 개발과 사용허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효율 낮은 김 활성처리제 사용만을 강요하지 말고 효율 높은 활성처리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2022년2월18일자 전남매일)

## 팬데믹 시대 블루오션 ‘관상어 산업’ 육성을

박종원 의원(담양1)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외출과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 ‘집콕’ 생활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취미 활동도 늘어나게 되었다. 그중 소위 ‘물멍’이라 불리는 ‘물 생활’이 새로운 여가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물멍’이란 수족관속 물과 관상어, 수초의 움직임을 오래 바라보며 마음의 평온을 누린다는 신조어다. 소위 집안에서 ‘물 생활’을 즐기는 ‘물멍족’이 늘어나면서 국내 관상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관상어를 ‘반려어’라 부르며 반려동물 시장과 함께 그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2027년 6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상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개와 고양이와는 달리 복합 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관상어 산업은 1차(증자 생산·양식), 2차(관련 용품), 3차(사육·관리·전시 서비스)까지 연계되는

복합 산업이며, 육종·품종 개량, 유전자 조작, 어병 관리 등 첨단 생명과학 기술이 요구되는 녹색 생명산업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2014년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16년에는 ‘제1차 관상어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어 지난해에는 1차 계획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차(2021~2025)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시 한 번 관상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 또한 관상어 산업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 시흥에는 아쿠아 콘텐츠와 쇼핑 문화가 융합된 국내 최대의 ‘아쿠아 펫랜드’가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관상어의 생산과 판매, 용품 제작, 교육,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수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상어 ICT 융복합 육종센터(충북 옥천), 토속 어류 산업화센터(경북 의성), 관상어 증자 육성 센터(경남 사천),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경북 상주)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남도에서는 관상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첫째, 관상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관상어 산업은 식용어 양식 위주의 연구에 밀려 인프라 및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관상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상어와 용품 모두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내 업체의 진입이 어렵다.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CITES)으로 해수 관상어의 현지 포획을 금지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관상어의 양식 산업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전남도에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관상어를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춘 어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등 관상어 가치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전남형 관상어 반려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올바른 관상어 반려 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과학관(여수), 섬진강어류생태관(구례) 등 관상어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여 요즘 한창 인기를 끄는 ‘아쿠아테리어’(아쿠아+인테리어)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신만의 수조를 꾸밀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통해 매니아층을 다지고 입문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관상어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교육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관상어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상어를 직접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육 기술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다. 도내 교육기관들을 활용하여 관상어 애호가 및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 지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관상어 사육 기술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상어 사육은 관상어 특성에 따라 수족관 관리 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상어 애호가에게 품종별 맞춤형 사육 교실을 운영하여 관상어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남도형 관상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할 수 있는 ‘관상어 산업 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해 고부가가치 관상어 산업이 전남도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22년2월21일자 광주일보)

## 코로나보다 더 무섭다는 노인들의 외로움에 관심을

김경자 의원(비례)



코로나19의 그림자가 걷히지 않은 채 새해를 맞아, 어느덧 2월도 다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인류가 구축해온 유·무형의 자산과 가치, 체계와 질서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며, 우리의 일상과 인식,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무엇보다 한국처럼 만남이 중요하고 관계 지향적인 사회는 오프라인 모임의 제한이 장기화되면 고립과 단절로 느끼는 마음이 남다르기 마련이다.

24시간 돌아가는 택배와 배달 문화가 있어 살아 같만 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거나 얼굴을 마주보며 음식을 나누던 일이 추억처럼 느껴지는 '비대면이 미덕'인 사회가 되었다.

더구나 이번 설 명절은 전파력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위세에 고향 방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 자녀와 손자 등 혈육 간의 왕래조차 소원해져 그야말로 노인세대는 삶의 낙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대면의 반대말은 비대면이 아닌 외면이라고 하듯이 그만큼 지쳐가는 노인들의 외로움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노인들을 위한 주요 시설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개방과 폐쇄가 반복되며 노인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들에게 있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단순한 노인복지시설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웃고 즐기는 소통의 공간이자,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을 더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해 주는 마음의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을 경로당도 마을회관도 문을 닫은 지 오래다. 경로당에서 장기를 돌 수도, 마을 회관에서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게 됐고, 치매 예방 교육과 같은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도 전면 중단됐으며,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중단되거나 정원이 대폭 축소됐다.

멀리 외지에서 사는 자식들과는 달리, 소소한 일상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던 장소와 노인들이 복지를 위한

대면 프로그램들이 막 막힌 탓에 당연히 집안에만 머물러야 하는 노인들은 무료함과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한 마디로 노인들이 갈 곳은 아무데도 없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 대부분은 홀로 사는 노인들로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6.5%로 고령사회에 속한다. 특히 이들은 만성질환,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각종 질병에 취약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되면서 외로움,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이른다는 통계 발표가 있었듯이, 노인 고독사와 자살 문제는 사회적 유대감에서 오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노년의 외로움은 빈곤만큼이나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

지금 노인세대들은 친척·가족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대가족 문화에 익숙하다. 코로나19 방역의 벽을 핑계로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대한 끈끈한 사랑과 관심이 약해지지 않았나 점검해 봐야하며, 특히 홀로 사는 노인

에 대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단순히 노인 개인이나 가정 내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사회적 노력과 주변 이웃의 관심이 어우러져야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지난해 1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인권 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인간은 누구나 늙고 노인들을 나약한 존재로 내모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며, 노인의 현재는 곧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음이 담긴 눈길로 타인과 연결될 때 삶은 단단해진다. 부모님과 주변 분들에게 영상통화라도 자주해 건강이나 심리상태 등을 살펴 드리라고 스스로 다짐해 본다.

(2022년2월23일자 광주매일)

# 위기의 민주주의, 브라질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구복규 부의장(화순2)



브라질은 축구와 삼바 카니발, 커피로 유명한 나라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추가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다.

룰라는 누구인가?

노동 운동가 출신으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 간 브라질을 통치한 대통령이다. 그는 기독교인이 가진 것을 빈민들, 극빈 계층에게 나눠주는 정책을 폈고 결국은 브라질을 세계 7위의 경제 대국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는 2011년 후계자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까지 정권 재창출을 시킨다. 지우마 호세프는 룰라보다 더욱 강한 개혁을 시도한다. 하지만 2015년 지우마 호세프의 재선 이후 15년간 억눌렸던 기독교에서 세계 원자재 가격 폭등과도 같은 외적 상황, 내부 검찰 세력과 언론 등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의혹 보도로 결국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룰라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다.

이후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막달 극우 정치인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좌파 정권은 무너지고 룰라에게 유죄를 선고해 자신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세르지우 모루를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법무 부 장관에 임명한다.

정치권, 검찰과 법원, 거대 기업, 언론 등이 결탁한 기독교 카르텔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로 인해, 룰라의 등장으로 성장하던 브라질의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후퇴하게 된다.

검정 유착의 장본인들은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대규모 돈 세탁, 거대한 반부패 스캔들, 뇌물과 공금유용 사건 수사를 지휘해 수많은 선출직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구속시키고 사법 처리해 국민들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얻었다.

브라질 민주주의 위기의 특징은 검찰과 사법부의 법 기술자들이 법적 수단과 장치를 동원해 보이지도 않고 의식할 수 없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침식해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사법 쿠데타라는 것이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개발을 명목으로 울창한 아마존 밀림을 밀어버리고 각료 절반을 군인으로 임명하며 과거 독재 정권을 옹호하고 원주민과 인종을 차별하는 발언을 일삼는 과격한 행보를 보이고 이를 지지 기반으로 삼았다.

기독교 카르텔의 사법 쿠데타로 극우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며 과거로 회귀한 브라질의 험난한 현대 정치사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통해 두 명의 대통령이 보여준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경종을 울린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모로 한국과 비슷한 현대사와 기독교의 카르텔 양상도 비슷한 브라질의 위기와 경험, 현재의 대한민국 민낯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빠져 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중차대하고도 어쩌면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세계 각국의 수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지만, 기독교와 언론은 험뜯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을 보라!

민주주의가 과거처럼 총과 칼을 동원한 군부 쿠데타에 의해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화된 사법권력이 기독교 및 언론과 손잡고 소리 없이 민주주의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올바른 선택에 달려 있다.

다가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대한민국이 대 전환으로 대도약을 거쳐 미래로 나가느냐, 또다시 과거로 후퇴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과거 보수 세력의 수장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비리와 국정농단을 구속 수감하고 탄핵했던 촛불시위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총체적 코로나 경제 난국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세력들을 타파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냉철한 사고를 통한 사리판단을 하자.

국가의 명운이 걸린 3월 9일 대통령선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올바른 선택,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부국강병으로 이끌 지도자만이 누구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인듯 하다.

대통령 선거는 오늘이라는 현실과 내일이라는 우리 후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것을 잊지 말자.

(2022년2월24일자 광남일보)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인구유입·정착시스템 필요

구복규 부의장(화순2)



우리나라 국내 총인구는 2020년에 5천184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본격화됐다.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50년 뒤에는 3천 766만 명까지 떨어질 전망

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2020년~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현재 5천184만 명에서 향후 10년간은 연평균 6만 명 내외로 감소해 2030년 5천1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는 2019년 통계청이 우리나라 인구 정점을 2028년으로 예측한 것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저출산 추세와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 ‘늙어가는 국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역의 핵심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 인구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지방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경제 활력 저하 등 직접적 영향과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 심화,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넘어 지역의 존폐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인구 지역 이탈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전남 인구문제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저성장과 탈산업화,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 청년세대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이들이 선호하는 공간에 대한 논의와 분석을 토대로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유입 정책 및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한다.

먼저 인구감소에 대응해 청년 유입 및 정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단계별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지역의 특성과 청년 인구의 유출입 현황, 유출 원인 등 인구감소의 원인분석을 전제로 정책 비전 설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그리고 지역특성과 타깃, 도시 청년의 니즈를 고려한 청년 인구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포괄적 분석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 독신 근로자,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

비 지원, 전입세대 파격 인센티브 부여, 청년 주택단지 조성, 신혼부부 전세 아파트 무상 제공 등의 다양한 지역 정착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출산과 양육에서부터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출산준비금, 신생아 양육비, 임신부 산후조리비용, 결혼 이주여성 산모 도우미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영아와 아동의 보육비·학원비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초·중·고·대학생 장학사업 확대, 등록금 및 기숙사비 지원 등으로 청년들이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도적으로 지역격차 해소에 나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의 인구감소 현황 파악과 인구 유입 정착을 위한 특성화 전략을 연구, 개발, 실행해야 할 것이다.

(2022년3월3일자 남도일보)

## 보육의 공적 책임과 역할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회(구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고, 국민들은 지칠대로 지쳐있다. 특히 교육 부분의 비대면화가 심화됨에 따라,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은 전적으로 가정의 몫으로

전가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다. 2021년 합계출산율 0.81이라는 수치는 OECD를 넘어 전 세계에서 꼴찌이며, 전 세계 최초로 합계출산율 0.85 미만의 수치를 기록했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전남의 합계출산율 역시 2021년 기준 1.02명으로, 세종시에 이은 전국 2위이지만 결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원인은 무엇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정, 양육에 대한 부담, 개인생활 영위 등을 비출산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결국 출산과 양육 문제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벗어나, 제도적 해결이 시급한 공적 영역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국가에서도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약 380조원의 저출산 관련 재원을 투입했고, 전남도에서도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시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기업규모별 사용현황을 보면, 종사자 300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63.5%가 사용중인 반면 종사자 4명 이하의 기업에서는 4.6%에 그쳐, 양극화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국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요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출산 문제와 함께 교육 양극화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했고 소득 계층별 대학교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가계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명문대학 진학률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현 사회는 자녀 출산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그간의 정책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실

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므로, 결혼·출산·양육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거·일자리·인프라 확충 정책들을 잘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산발적 정책들이 '백약이 무효'로 밝혀진 이상,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극복 마스터플랜'을 설정하고 정부와 지역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출산·보육의 지역 간 균등한 기회 부여도 중요하다. 우리 전남의 인구가탈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 소멸이라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등에 편중된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취약 지역 위주로 개편하여 지역 간 균등한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020년 필자가 대표 발의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 역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제정된 것이다.

로봇이 진화하고 AI가 인간을 대신하더라도 출산과 보육은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음이 필요하다'는 속담처럼,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가정만의 책임이 아닌,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국가 모두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애 전 주기별로 연결성 있는 정책 수립과 불

합리한 제도의 개선, 적절한 재정 투입과 운영이 필수적이다.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록 제11대 전남도의회가 다짐했던 "도민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디 올해는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아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꿈을 그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 국가의 미래가 더 밝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년3월6일자 무등일보)

## 젠더갈등의 오해와 이해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목포1)



폭풍 같던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를 둘러싼 저성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아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에 성공해 빈곤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잠재돼 있던 문제점들이 빈부갈등, 세대갈등, 남녀갈등, 이념갈등 등 수많은 사회적 갈등들이 곳곳에 표출되고 있다.

이중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남녀갈등이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은 여성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양상을 보여 취업과 주거난 문제에 직면한 젊은 층에게 젠더(gender) 갈등을 심화시켰다.

### 성별 편 가르기식 대선 전략

오랫동안 남성 위주의 제도와 관습을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남녀평등 사상이 자리 잡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녀 간 차별이 심하다는 주장

이 많다.

우선 군 복무에 대한 남성만의 징병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성계에서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를 여성 불평등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86만여 원으로 남성 근로자 431만여 원의 66.3%에 불과하다.

또한 일각에서는 국회와 시·도의회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 국공립대 여성교수 할당제 등 능력이 아닌 성별 우선의 '여성 할당제'를 남녀 불평등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젠더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로 인한 소통의 실패에 있다.

더구나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은 남성이 여성과의 경쟁에서 점점 밀려날 수 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성평등 정책을 비판하고 그 원인을 서로 다른 성별에 돌리게 되면서 젠더갈등의 주 요인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정치권에서도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20~30대 남성의 성차별 의식을 선거전략으로 삼아 성별 편 가르기식 정책으로 젠더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금처럼 과열된 선거전을 보면 이후의 국정 운영이나 정치에 대한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부터 시작해 어느 한 편이 아닌 모든 국민의 말을 듣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젠더갈등이 커진 이유가 복합적인 만큼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 성평등·통합 정책 펼쳐야

먼저 남녀가 처한 서로 다른 현실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교육부터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종차별을 겪어 온 서양에서는 어릴 때부터 차별, 혐오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상호 간 이해와 소통하는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젠더갈등이 청년층에서 심한 이유는 극심한 경쟁 환경에서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되도록 시스템 개선과 해결이 수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국민통합을 이뤄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배려하는 마인드를 갖고 집단 간의 타협을

이끌어 내 사회가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치의 회복은 젠더갈등을 해결할 단초이며 성평등 사회로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진정한 성평등 정책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2022년3월10일자 전남매일)

## 여수국가산단, 안전·환경친화 산단으로 거듭나야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여수6)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도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 정책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필자는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권익 신장과 전남도의 환경개선 등 지난 2년간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술한 노력에도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 바로 여수국가산단의 환경과 안전문제 해결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수산단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아시아 최대의 석유화학공업기지로 '국가 경제성장의 발판'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일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여수산단은 화학물질 유출과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죽음의 산단'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 1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2명이 사망했다. 매년 4명 정도가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은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시설개선과 안전관련 인력확충을 산단 입주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기업들은 위험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선택했다.

결국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전교육도 변변한 안전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이게 됐다.

최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가 여수산단에서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건의 대형 폭발사고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사망자 7명 중 6명이 하청업체 노동자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이 작업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고 모두 인명을 경시하고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윤리적인 기업이 일으킨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것이다.

필자는 두 건의 사고현장을 모두 방문해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충분한 신속한 보상 등을 요구했다.

특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수사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한 집행만이 기업의 실효성 있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위험의 외주화도 대형사고의 위험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비윤리적 행태는 환경문제에서도 드러났다. 2019년에 밝혀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기록 조작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은 여수산단의 일부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 동안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축소 또는 조작한 사실이 정부에 적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지역주민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범죄까지 서슴지 않는 기업의 민낯과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에 분노했다.

사건 직후 기업들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감독 강화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불법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2021년 6월 전남도와 여수시 합동점검에서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또다시 적발된 것이다.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기업과 정부,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필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의회 최초로 행정사무감사에 대기오염물질 배출기록 조작사건 연루 기업 공장장들을 증인으로 불러 기업이 약속한 환경개선 대책 추진이 미흡함을 질타했고, 불출석한 일부기업 공장장들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했다.

또 무너진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립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24시간 감시하고 고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환경오염 등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충남 당진, 경기 안산·시흥,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도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여수산단에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립해 무너진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 기업의 윤리경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었다.

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이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에서 환경,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고 부른다.

유럽과 미국에선 ESG가 기업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됐고,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산업재해를 일으킨 여천 NCC가 ESG 영향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투자시장에도 이미 ESG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여수산단 입주기업들도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깨닫고 환경오염물질 저감, 노동자 인권보호 등 환경과 안전문제 해결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렇게 우량기업으로 거듭나 활력이 넘치는 여수산단을 만들고,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국가 경제성장의 발판'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2022년3월10일자 광남일보)



## 전남 치유산업 컨트롤타워 필요

박종원 의원(담양1)



각종 질환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도시와 농어촌

의 소득 격차 확대 등 인구 소멸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가행복지수는 OECD 37개국 중 35위로 낮으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수명(82.7세, OECD 평균 80.7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 경험자도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힐링(Healing), 웰빙(Wellbeing), 웰니스(Wellness) 등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치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지난해 3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치유산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

적으로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 등 자연 자원을 활용한 치유가 각광을 받고 있다.

산림치유는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수목뿐만 아니라, 숲의 냄새, 숲에서 나는 소리, 숲에서 생산되는 산소, 숲에서 나는 부산물을 이용한 음식물 등 숲의 모든 환경을 총체적으로 활용해 심신의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 방법이다.

해양치유 역시 해수, 해양 광물, 해양생물, 해양 기후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체질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또한 치유농업은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말한다. 치유농업은 채소와 꽃 등 식물뿐만 아니라 가축 기르기, 산림과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의료적 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일반 농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농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위의 치유산업들은 모두 자연을 이용한 스트레스 감소, 우울감 완화, 삶의 만족도 상승 등 건강증진 효과와 함께 인지적,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산업은 지방소멸 극복 수단으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지방소멸의 요인 중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인데 치유산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노르더나이스는 주민 6,000명이 거주하는 섬인데 근무 인력이 1만 2,000명으로 인구의 2배에 달하는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 6,000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도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농수산자원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치유산업의 근간이 되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인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전라남도가 갖고 있는 지리적 환경적 요소를 최대한 살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치유산업 육성정책을 개발해 농어업 농어촌의 활력과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전남의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2022년3월11일자 전남매일)

## 돈 버는 농업으로 화순경제를 살리자

구복규 부의장(화순2)



최근의 기후변화, 소비패턴 변화,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농작물의 재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촌에서 농업활동을 통하여 여가를 활용하고, 정서적 및 신체적 활력을 찾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욕구가 늘고 있다.

급변하고 있는 농업 환경에 대응해 화순군도 농업인의 고령화와 감소에 따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작목의 도입 및 실증연구에 시선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연중 생산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 실현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귀농귀촌형 농업모델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에 따른 재배가능 작물 선별과 적절한 재배기술의 개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돈 버는 농업, 잘사는 농촌'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할까?

첫째, 지역특화 농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산림소득산업 확대, 농·축협 협력 로컬푸드 출하 시스템 구축,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귀농·귀촌 정착 스타트업 창업 지원을 통해 농업으로 돈 버는 화순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첨단 스마트 팜 시설 구축, 원예시설 현대화, 에너지 절감 시설 등을 지원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원예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지역여건에 부합한 농업기술보급과 기반구축 및 현장 수요기술 보급확대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에 힘써야 한다.

넷째, 농촌자원 활용기술 보급으로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전문농업인력 육성과 맞춤형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농촌 인력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계화와 자동화 기자재 확충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맞는 다양한 품목을 발굴, 통합 마케팅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공동선별, 공동출하 등 공선조직에 만전을 기하고 소외된 소규모 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시설 원예농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관이 합심, 협력하여 적극적인 섬김행정과 현장중심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돈버는 농업! 잘사는 부자농촌! 농업인 행복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농업 동향을 보면 점점 농산물 생산만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 적응하여 안전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의 보완, 힘을 덜 들이는 영농방법, 새로운 기능성 작물의 도입이 필요하다.

스마트팜과 아열대 작물 연구를 통해 화순군 브랜드화 농산물을 생산, 유통, 판매,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치유농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발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준재배 매뉴얼 제작 및 보급, 교육 및 컨설팅 가공을 시작으로 체험까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6차 산업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한다.

화순군도 이제 '농촌 인적역량 강화'와 '지역농업의 조직화, 규모화, 브랜드화' 등에 힘쓰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능동적인 농업을 만들어내야 할 때이다.

(2022년3월22일자 매일일보)

## 전남도민 평생교육 네트워크 필요

정옥남 의원(비례)



현대사회는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구조·노동시장 환경 변화와 같은 이유로 평생에 걸쳐 학습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2020년 7월 도민 평생교육 전담기구로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 평생학습 기반 강화를 위해 '아름다운 남도, 민주시민 되기'라는 교재와 디지털 문해교육 UP앱을 개발하고 강사 전문성 향상교육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찾아가는 생활문해교실, 장애인대상 맞춤형교실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 격차를 완화하는데 주력하며 시·군은 자체 평생학습지원센터를 통해 성인문해교실, 직업능력향상, 문화예술스포츠, 인문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은 2021년 기준으로 2020년 대비 9.3% 하락했으며, 전남도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5.0%로 2020년보다 11.4%

하락, 전국대비 5.7%로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평생교육 참여율 감소에는 코로나19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 성인 중 22.4%는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코로나19 영향이라는 답변이 40.1%,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 부족(32.6%), 가까운 거리에 교육훈련기관이 없어서(2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평생교육을 통해 느끼는 만족도는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습득(77.5점), 교양함양 및 지식습득 등 자기개발(77.4점), 심리적 만족 및 행복감 증대(72.2점) 등에 도움이 됐다는 순이었다.

이 결과는 평생교육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가 높고, 특히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좇아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경제확산 등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일과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라남도가 앞장서 도민 평생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전남도내 평생교육 체계는 전남도와 시·군, 그리고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이 각각의 조례 등에 따라 추진하고 있지만 각 기관에서 전반적인 연계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평생교육 수요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의 원스톱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전남도가 평생교육 자치분권을 이룬다는 자세로 각각의 평생교육 주체인 도교육청, 시·군 및 시·군 교육지원청과 연계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먼저 전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협의회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각 기관의 관계자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평생교육 연계 안내, 체험 및 홍보 등 공동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심지역 위주로 편중된 평생교육은 아직까지 농어촌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며, 도민들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개고되어야 한다.

전남도가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평생교육 추진 기반 및 홍보를 강화한다면 도민의 참여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며,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이 지역 내 인구 유출을 줄이고 새로운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2022년3월22일자 광남일보)

## 생활정치의 시대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목포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5일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 선거사무실에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걸렸고, 명함을 나눠주는 손길도

분주하다. 하지만 대선이 불과 한 달 전에 끝나서인지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관심도는 예전 같지 않고, 또 선거냐는 불만 섞인 눈빛도 쉽게 보인다. 정치색이 강한 지역이기에 대선 결과에 따른 피로감은 높을 것이고, 뉴스와 정치에 거리를 두려는 시민들의 마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된다.

필자는 94년 대학에 입학하여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였다. 과거의 정치를 연구하면서 현재의 정치를 바라봤고, 또 미래의 정치를 꿈꾸었다. 하지만 과거원료형의 정치학을 공부할수록 현재진행형의 현실정치는 혐오감을 줄 뿐이었고, 정치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은 '정치외교학과'를 다닌다고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학생운동의 마지막 세대, 전대협에서 한총련으로 이동하는 그 시기에 학생운동에 뛰어들 학생들의 투쟁의 대상은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중앙정치다. 국회와 정당, 청와대와 권력기관이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던 시기였기에 투쟁의 대상도 중앙정치일 수밖에 없었다.

2022년 4월이다. 많은 것이 바뀌었다. 통신이 발달했고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여론과 이슈에 민감한 정치, 정치를 움직이는 언론과 SNS, 집단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시대 변화에 맞추어 정치도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4년에 한번 씩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5년마다 바뀌는 새로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중앙 정치에 대해 대리 만족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교육을 받아왔지만 선거기간 중 잠깐 느껴지는 좋은 느낌? 거대담론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중앙 정치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진정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 지역일꾼 선발 갈수록 중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생활정치의 시대이다.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다. 손에 잡히지 않았던 '국민'이라는

단어보다 '주민'이라는 단어가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31년간의 지방자치를 넘어 이제 '지방자치2.0시대'가 개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주민의 참정권과 권리를 더 중요시 하는 시대로 전환된 것이다.

55일 후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패러다임 전환기'의 지역일꾼을 선발하기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 청소년과 노인, 교통과 환경, 주거와 복지 등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생활정치인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인물을 선택하는 선거여야 한다. 바뀐 정치환경을 의식하지 않고 단순히 눈과 귀에 익은 정치인을 선택한다면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치서비스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토록 지역의 현안, 특히 내가 사는 지역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을 선택해야 하지만 지방선거의 무게감은 다른 선거에 비해 훨씬 덜하고 후보에 대한 관심도도 낮게 나타난다. 결국 피해는 유권자인 주민이 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정치 신인 투자-관심을

이번 선거처럼 정치 후보군의 다양성을 주장했던 선거가 있었을까? 여야 대선캠프에서 촉발된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는 사회적 동의를 얻었다. 능력 있는 인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에서 다양한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후보의 선출과정에 있어서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부모와 청소년,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함께 조화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개방해야 하고, 지방선거 이후 지역 일꾼을 선발하는 과정도 개선되고 발전되어지길 희망한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이 중요한 만큼 지역의 정치인을 양성하는 과정도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때이다. 단순히 여성 청년이 아닌, 능력을 갖춘 정치 신인이 등장한다면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하고 주민들은 환호할 것이다. 지방의 정치 환경이 변화된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성 정치권과 사회단체의 관심과 역할을 기대해 본다.

(2022년4월6일자 전남매일)



## 외국인 계절근로제, 공공주도 시스템 구축해야

이혜자 의원(무안1)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다.

그러나 최소 90일 이상 고용을 해야 하는 탓에 영세 소규모 농가는 이용하기 어려웠고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작물이 정해져 있는 등 농촌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다.

또한 지난 2년간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평균 10만원 수준이던 근로자 하루 일당이 최대 15만원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이러한 인건비 상승은 코로나19와 농산물 소비 감소로 최저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한 농민들에게 앞친데 덮친 격이다.

이에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농민의 건의를 반영해 작년 12월14일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계절근로제를 연중 참여할 수 있게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 한해 1주일 단위의 고용

을 허가했다.

또 계절근로자 적용 대상 농작물 제한을 없애고 농가당 고용인원을 기존 최대 9명에서 12명까지 확대했으며 지자체나 농협 등 공적인 운영 주체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으로 농민이 겪는 애로사항이 일부 해결됐으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우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작년 1월부터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로 만든 숙소는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포기하고 브로커를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공모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에는 무안, 해남, 영암, 담양이 선정됐고 필자의 지역구인 무안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고 15억이 투입돼 50명 안팎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촌 지역 전반적으로 숙소가 부족한 실정이

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휴양시설을 대여하거나 폐교를 수리해 숙소로 재활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인건비, 보험료, 교통비, 숙박비, 자가격리비용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현재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 보험료와 자가격리 비용,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고, 전남에서도 무안, 해남, 장흥, 담양에서 자가격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많아져야 하고 특히 숙소 마련이 어려워 고용을 포기하는 소규모 영세 농가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고 정부는 비자발급 등 행정적인 보조와 규제만 하는 시스템이어서 농가에서 인건비뿐 아니라 외국인의 태업이나 도주로 인한 피해까지 모두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정부, 지자체, 농협 등 공공영역에서 고용부터 인력관리까지

역할을 분담하고 농가는 이에 대한 서비스 비용만 지불하는 구조로 수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는 하반기 시범 운영 예정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농촌에서 그동안 농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짊어져야 했던 부담이 너무나 컸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제도개선과 지원을 병행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농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2022년4월22일자 전남매일)

## 공약 이행, 유권자가 만든다.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목포1)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거리와 상가 곳곳에 울리던 로고 송도 그치고 교차로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운동원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2월 15일

부터 시작된 3·9 대선, 5월 19일부터 시작된 6·1 지방선거에 대한 피로도는 극에 달한 느낌이다.

전남의 경우 대선 패배의 영향이었을까? 민주당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은 전과 같지 않았고, 무소속연대 움직임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면 인물론과 동정론, 심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후보자를 평가했고 어느새 익숙한 단어가 되어 있다.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결론이 없기에 결국 다투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그 놈이 그 놈'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소리치지만 한 사람을 선택하는 문제이기에 동질감과 배신감은 인간관계마저 양분시키고, 선거는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공동체 내에서 오래 지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지역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2년 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강화되었지만, 여러 여건상 대의정치라는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주민들 지방정치 관심 필요

이제 나를 대신해서 지역을 위해 4년간 열심히 일할 일꾼들이 선출되었다. 선거는 마무리 되었지만 선출된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정에 배달된 후보자별 공보물을 유심히 살펴보면 선출직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의 수많은 공약을 볼 수 있었다. 어떤 공약은 선거철만 되면 단골로 등장하고, 어떤 것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수많은 공약들을 보면서 유권자들은 후보를 선택하고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기대를 한다.

전남은 6·1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의회 의원 61명, 기초의회 의원 247명, 총 308명의 지방의원을 선출했다. 이들이 평균 10개의 공약을 제시했다면 4년간 지켜야 할 공약은 3,000개 이상이다. 단체장의 경우 별도로 공약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많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많은 공약이 이행된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경우는 다르다.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없고 지역주민들조차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때문에 선거에 잠시 나왔다 사라지는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 지역의 지자체장이 자치단체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한다면, 지역구 의원들은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의 역할과 또 선출된 지역의 대변자로서 지역의 발전, 그리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에 지역 주민들과 실생활에서 더 많이 접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내용의 약속을 제시한 경우가 많다.

### 정치인 공약 지키는지 감시

후보들이 수많은 약속을 하지만 지켜지는 약속은 얼마나 될까? 또 지켜지지 않고 매 선거 때마다 다시 올라온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당선된 정치인이 공약을 이행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이라 말하고 싶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공약 역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과, 반대 여론,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좌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 글을 쓰는 필자 또한 지난 2018년 여러 공약을 제시하였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 공약을 기억하고 먼저 이야기하는 주민이 없다면 정치인은 약속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사인을 준다면 이는 가장 큰 압박이 될 것이다.

주민의 정치적 관심과 지역의 발전은 비례한다. 자칫 사장될 수 있는 사업을 다시금 추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결국 혜택은 주민이 누리게 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처럼 공약 이행은 정치인이 챙겨주는 시혜적 혜택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유권자가 정치인에 대해 당당히 외치길 기대한다. 당신은 공약을 지키고 있는가?

(2022년6월1일자 전남매일)

## 낭만의 도시! 목포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어때?

전경선 의회운영위원장(목포5)



목포시 죽교동에 자리한 유달산 등터에는 목포의 눈물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그래서 일까? 유달산에 오를 때면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면 삼학도 파도깊이 스며드는데~” 목포의 눈물’ 가요가 절로 흥얼거리진다. ‘목포의 눈물’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때 민족의 서러움을 달래주었던 노래로 지금까지도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다. 원곡자인 이난영의 목소리로 노래를 들어보면, 목포에 얽혀있는 슬픔과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더욱 더 실감난다. 이렇듯 목포에는 유서 깊은 문화자원이 술하게 많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목포시 관광객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577만 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방문지로 해상케이블카(64만 명), 갯바위(48만 명), 춤추는 바다분수(47만 명), 고하도 전망대(43만 명), 1987영화촬영지(24만 명), 목포근대역사관(15만 명) 등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인기 관광지는 골프장, 워터파크, 리조트

등 대형 휴양시설로 관광객을 유인한다. 목포의 관광지는 다른 지역과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낭만향구 목포라는 도시 이미지를 내세운 곳과 근대역사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소규모 공간이 대부분이며, 관광문화의 융합을 일으키는 주체가 시민이라는 점이다.

목포시는 시민이 주도하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전남 최초로 ‘제3차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됐다. 올해 3월 비전선포식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시민설 명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개항 문화향구도시 목포’라는 비전으로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99억 원, 지방비 99억 원 등 총 1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문화 치유사업·항구문화 지원·미래문화 준비단·수요문화 아카데미 등을 통한 문화인재 양성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교류탐험대·목포문화의 날·문화향구 페스타 등 문화도시 브랜드 확산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치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이며 안전한리

가 우수한 관광지를 선정해 알리고 있는데, 고하도와 목포자연사박물관, 목포해상케이블카 등 3곳이 2022년 안심관광지로 선정됐다. 이 3곳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특집관에 소개되고, ‘여행가는 달(6월)’과 연계해 집중 홍보되고 있다. 전국적인 홍보에 힘입어 최근 목포의 숙박업소는 주말과 평일 할 것 없이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만실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해제 특수까지 겹쳐 목포시는 이를 놓칠세라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 지난 5월 테마형 시티투어 ‘로맨틱 선사인’ 운행을 시작으로 전통한옥 게스트하우스인 춘화당에서 열리는 ‘한옥 인문학콘서트’,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개최되는 ‘생생문화제’ 등이 관광객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 미디어마케팅도 목포 알리기에 큰 역할을 했다. 세계적인 붐을 일으킨 웹드라마 ‘파친코’, 인기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예능 프로그램 ‘고두심이 좋아서’ 등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목포를 알리는 데 충분했다.

대면활동이 일상화되는 요즘, 문득 지난해에 타 지역 지인에게 소개했던 ‘목포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생각이 난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국내 한달 살기 지원사업을 추

진했다. 목포시에서는 틈새를 노려 직장인도 참여 가능한 일주일 살기를 등장시켰다.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70개팀 139명의 외지 관광객을 유치했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민이 참여한 체류형 관광은 목포형 관광 모델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난 4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교통 서비스 지출이 90% 늘고, 배달음식 지출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옛 문화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 목포에서 먹거리를 즐기며 ‘일주일 살아보기’ 격하게 추천한다.

(2022년6월13일자 광남일보)

## 일상생활 속 공원, 도시의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김태균 의원(광양2)



최근 번아웃 증후군으로 인한 현대인들의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으로 불안감과 우울증까지

동반되는 번아웃 증후군을 극복하려면 자신을 위한 휴식시간을 갖으며 가벼운 산책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숲이 있는 생활공간으로 환경이 개선된다면 인간의 행복지수는 어떤 변화를 보일까?

기초과학연구원(IBS)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 CI 연구팀이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세계 60개국, 90개 도시의 녹지 공간을 분석하고 내린 연구결과가 있다.

2021년에 발표된 결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회에서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도시의 녹지를 늘리는 게 시민을 더 행복하게 한다'고 한다.

도시별 녹지 면적을 유엔의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자료와 교차해 분석한 결과,

녹지의 면적이 넓을수록 시민 행복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파악했다.

이는 도시의 녹지 공간이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요인 중 하나이며 녹지 조성에 중요한 의미를 띠어 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그리고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라는 환경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키워드는 "녹지"이지 않을까 싶다.

원도심 중심으로 곳곳에 공원이나 정원을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연친화적인 도시조성은 환경문제의 대안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민 누구나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영위할거라 믿어 의심치 않다.

지역 내 작은 공간을 활용해 지역특색에 맞는 콘텐츠는 스토리텔링을 구상한다면 상당한 면적의 부지 마련이 필요한 대형공원보다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방치된 유휴지나 공한지, 폐선 부지, 단지 사이, 하천변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다면 지역의 미관을

정화하고 도시 열섬현상의 저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들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 조성하면 주민참여의 문턱 낮아질 것이다. 지역 공간의 대중성을 높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자리잡는 계기가 돼 주민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해외에서도 이미 공원은 휴식공간을 넘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 도시의 환경개선 및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공원 '포켓 파크(Pocket Park)'를 들 수 있다.

미국 맨해튼에 세계 최초의 포켓 파크인 페일리 파크(Paley Park)는 페일리 일가 빌딩 사유지에 인공 폭포와 담쟁이덩굴, 나무, 휴식을 취할 탁자와 의자를 비치해 빌딩숲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왔다.

전남에서도 도시의 공기를 순환·정화시키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수목들을 식재해 도민들이 자연생태를 쉽게 접하거나 쉼터 시설을 이용하며 심신을 힐링할 수 있

도록 다양한 녹색공간을 확대하고 있다.

도민 생활권 주변을 지역 특색이 부각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지역의 명소로서 자원의 가치성도 확보될 것이다. 무엇보다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민에게 보다 더 쾌적한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지친 심신에 휴식과 치유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기대가 된다.

누구나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영위하고자 한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오감으로 계절을 느끼고 짧은 휴식시간 속에서도 여유를 충전할 그런 매력적인 공간, '일상생활속의 공원'을 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길 바란다.

(2022년6월23일자 전남일보)



## 4년, '전남발전'의 성적표를 기대한다

박문옥 기획행정위원장(목포1)



우리 사회에는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 학생은 성적으로, 교수는 논문으로, 기업은 매출과 이익 규모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상대적 능력과 성과물은 나를 바라보는 객관적 기준이 되기에 더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우리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기준으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까? 모든 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이 동일하지 않기에 획일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순위를 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여론조사 방법을 통해 주민생활 만족도나 단체장에 대한 지지도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의 경우 예산 확보 실적과 현안 사업 해결 등을 통해 실력을 검증받는다.

### 예산 확보·현안 해결로 검증

6월의 달력 페이지가 뜯겨지고 한해의 절반이 지나간다. 민간은 올해 계획한 사업이 잘 추진되는지 점검하는 때이지만, 행정의 경우 내년 살림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7월과 8월은 연초에 발굴한 2023년 사업 예산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지, 미뤄질지가 결정되는 시기이다.

예산 협의 과정을 통해 기재부를 설득해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정치적 해결 방법을 찾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하거나 정치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자력으로 추진하기 힘든 대형 사업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은 미뤄진다. 이는 자신을 선택해준 유권자에게 능력으로 평가되고, 다음 선거에서 4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연장할지, 아니면 계약을 종료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요즘 지방 뉴스에는 '기재부 방문'과 '국회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자주 노출되는 이유이다.

지난해 전남도의 경우 8조 4,000억에 달하는 국고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전남 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16년 국고 예산이 6조원이었던 상황과 비교해보면 40%의 정부 예산이 추가 확보되었기에 성과 측면에서 보면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 하겠다.

22년 6월 현재, 상황이 바뀌었다. 호남에 호의적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되었고, 정부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힘'이 정권을 잡았다. 압도적인 국회의석수를 가지고 있지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기재부의 힘이 절대적이기에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대통령직인사위원회 구성과 정부 각료를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서 호남 소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전남의 미래 먹거리로 추진되어 오던

해상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 국립의과대학 유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차별받지 않는 '예산 배정', 그리고 '전남 대도약'과 '청년이 돌아오는 희망 전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정부를 설득시켜야 할까?

지난 5년간의 눈부신 성과와 발전은 모든 구성원의 피땀어린 결과물이다.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의 5년은 전남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이고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문재인 정부를 지나며 설계한 전남의 미래 비전과 미래 먹거리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장되지 않고 대한민국 전략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이를 위해 사업지를 대체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흥을 주축으로 하는 우주발사체산업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해상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산업, 그리고 영남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사업 역시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좋은 예이다.

### 위임 권한·의무 성실히 이행

두 번째 지방소멸 대응을 통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타 지자체와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을 함께 주문한다. 지방소멸은 필연적으로 국가소멸을 가져온다.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은 필자가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진영 간의 대결이 아닌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과감하게 추진하길 요구한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앞으로 4년은 당선인의 시간이다. 일을 하기에 긴 시간도 아니지만 짧은 시간도 아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 진영을 넘나드는 광폭 행보, 인수위원회 구성을 통한 준비 활동 등 많은 활동들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정치 환경이다. 정부를 상대하고 설득하는 일이 전과 같지 않다. 4년, 새로운 임기의 출발점에서 있는 호남의 모든 당선인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때이다. 유권자에게 위임 받은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4년 후 모두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길 기대한다.

(2022년6월30일자 전남매일)

###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 본회의 방청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전화 (061) 286-8332번을 이용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방청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과 술기운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의회 견학

전라남도의회는 청소년들에게 의회 현장을 견학하고 체험토록 함으로써 지방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고자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의회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견학신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전라남도의회 누리집(<https://www.jnas-sembly.go.kr>)의 견학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방문 10일 전까지 팩스(061-286-8490)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의회소식지 신청

생생한 의정활동을 담은 의회소식지를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라남도의회 누리집(<https://www.jnassembly.go.kr>)에 접속한 후 자료실에 있는 의회소식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배송지로 무료로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인터넷 생방송 시청

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이 생동감 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누리집(<https://www.jnassembly.go.kr>)에 접속한 후 메인 화면의 인터넷방송을 선택하시면 회의 진행 과정을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sup>목</sup>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sup>수</sup>	24 <sup>목</sup>	25	26	27	28	29

※ 상 연휴 1.31.-2.2.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361회 임시회(11일간)  
· 도청 및 교육행정 집권(26~27)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sup>목</sup>	18	19	20	21	22	23
24 <sup>수</sup>	25	26	27	28	29	30

제363회 임시회(2일간)  
· 제12회 의회 원 구상(6-7)  
제364회 임시회(11일간)  
· 업무보고(상임위), 안전차리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sup>목</sup>	4	5	6	7	8
9 <sup>목</sup>	10 <sup>금</sup>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sup>수</sup>	24 <sup>목</sup>	25	26	27	28	29

제366회 임시회(10일간)  
· 도청 및 교육행정 집권(18-28)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sup>목</sup>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제359회 임시회(14일간)  
· 업무보고, 안전차리, 상임위 활동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sup>목</sup> 6 7
8 <sup>목</sup>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361회 임시회(11일간)  
· 도청 및 교육행정 집권(26~27)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sup>목</sup>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363회 임시회(2일간)  
· 제12회 의회 원 구상(6-7)  
제364회 임시회(11일간)  
· 업무보고(상임위), 안전차리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367회 제2차 정례회(45일간)  
· 2022년 행정사무감사(1~15)  
· 2022년 추경예산 제안설명 및 2023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연설(17)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sup>목</sup> 2 3 4 5
6	7	8	9 <sup>목</sup>	10 <sup>금</sup>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360회 임시회(9일간)  
· 안전차리, 상임위 활동  
※ 제2차(대통령 선거3차)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sup>목</sup> 2 3 4
5	6 <sup>목</sup>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362회 임시회(8일간)  
· 제1차(대무리, 긴급안전차리)  
※ 제2차(지방선거3차)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sup>목</sup>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365회 제1차 정례회(15일간)  
· 2021 감사 및 예비비 지출승인  
· 행정사무감사 계획구립  
※ 추석 연휴 9.8-9.12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sup>목</sup>	26	27	28	29	30	31

· 2022년 추경 예산안 승인(9)  
· 2023년 예산안 승인(15)

회기 9회 125일(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7회 65일)

본회의 날 ● 회기 ■



전라남도의회

<https://www.jnassembly.go.kr>

## 전라남도의회 소식